

# 한국 경제의 선진화와 성장 잠재력

- 성장 잠재력 2%p 확충 방안

2008. 1.

현대경제연구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유 병 규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113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본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을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각 인용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못하였음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목차

## I. 한국 경제의 선진화 의의와 전략

- 1. 새 정부의 당면 환경 ..... 1
- 2. 경제 선진화 비전과 성장 잠재력 ..... 5

## II.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현황

- 1. 성장 잠재력 추이의 특징 ..... 11
- 2. 성장 잠재력 하락의 원인 ..... 12

## III.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 - 9대 분야 45개 핵심 정책 과제

- 1. 산업 : 신성장 동력 확보 ..... 19
- 2. 금융 : 금융입국의 실현 ..... 37
- 3. 공공재정 : 공공 부문의 효율성 제고 ..... 49
- 4. 복지 :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 ..... 66
- 5. 남북관계 :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동북아 특수 창출 ..... 81
- 6. 기업 : 시장 경쟁 체제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화 ..... 100
- 7. 환경 : 지속 성장 가능 경제 체제 확립 ..... 118
- 8. 교육 :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적 자본 육성 ..... 130
- 9. 의식 가치관 : 사회 갈등 해소 및 국민 통합 ..... 146



# **I . 한국 경제의 선진화 의의와 전략**

- 1. 새 정부의 당면 환경**
- 2. 경제 선진화 비전과 성장 잠재력**



## I. 한국 경제의 선진화 의의와 전략

### 1. 새 정부의 당면 환경

#### □ 대외 환경

○ (패러다임 전환) 한국이 선진 경제 사회 국가를 건설하려는 지금 세계는 과거의 사고 틀과 행동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 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냐의 여부는 이와 같은 세기적 paradigm shift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음
-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興亡盛衰는 당시의 시대 정신과 세계 경제의 큰 흐름(megatrend)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응전하느냐에 좌우되고 있음을 역사는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임

○ (세계화 심화와 환경문제 현실화)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은 세계화 현상의 심화로 국가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임

- 냉전 체제의 붕괴와 함께 이루어진 급속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투자 및 금융 거래의 국제화와 세계적인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 등을 유발하여 경제 활동의 세계화 현상을 심화시킴
- 세계화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 틀에서는 개별 국가의 정부 역할과 기능은 그 경제적 의미를 점차 잃어가고, 시장이라는 가격 기구에 의한 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상위 개념의 가치 질서로 자리잡음
- 이와 같은 세계화 현상은 세계 전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케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여 국가간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선후진국간의 갈등의 골을 갈수록 깊게 하고 있음
- 게다가 거대한 규모의 국제적인 투기성 자본이 세계 각 국을 수시로 넘나들면서 국제 금융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음
- 한편,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토의정서 발효, 환경 통상마찰 강화, CO2 시장 활성화 등 세계 경제 정치 통상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됨

- (지식기반경제 확산) 두 번째는 지식 기반 경제의 성숙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생성되고 경쟁력 결정 요인이 달라지고 있는 것임
  - 디지털 혁명을 필두로 한 과학 기술 혁신의 가속화는 정보통신(IT)·바이오(BT)·나노 테크(NT)와 같은 신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유망 산업 부문을 생성시키고 있어 이들 신 산업이 21세기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과학 기술 혁신의 가속화에 의한 지식 기반 경제의 성숙은 노동과 자본보다도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획득이 경제 활동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함
  
- (다극화 시대 전개) 세 번째는 세계 경제력 구조의 다극화와 문명간 충돌 양상이 가시화되고 있어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임
  - 향후 세계 경제력 구조는 미국의 지속적 성장과 유럽 연합의 발전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BRICs의 부상에 의한 다극 체제가 성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등 문명간 충돌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냉전 시대보다 더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세계 정세가 영향을 받게 되어 세계 정치 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리더십 상실로 WTO 다자 체제의 기능이 약화되고 경쟁 심화 등 세계화의 부작용이 증가하면서 개별 국가들이 지역주의로 문제를 해결코자 하고 있어 국가간 지역간 경제통합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 (동북아 경제권 경쟁 가열) 네 번째는 중국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연평균 성장률 9%대에 달하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함
  -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함



○ (한반도 정세 불안) 다섯 번째는 북한의 핵 문제 해소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점임

- 북한의 핵 문제가 해소되면서 북미, 북일 간 외교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활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큼
- 반면, 냉전적 관계가 심화될 경우에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간의 긴장과 대립 관계가 악화될 우려도 존재함

□ 대내 환경

○ (샌드위치 경제) 국내 수출 상품의 경쟁력 약화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크게 감소된 반면, 대일 무역 적자는 오히려 대폭 확대, 한국 경제의 '샌드위치론' 부상

- 대중 무역 흑자가 2007년 186억 9,465만 달러로, 2006년 209억 6,700만 달러보다 10.8% 축소
- 대일 무역 적자는 2007년 299억 809만 달러로 2006년 253억 3,100만 달러에 비해 18.1% 증가
- 그 결과 한·중·일 3각 무역에서 발생하는 한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다시 반전됨(2002년 83.6억, 2003년 58.3억, 2004년 42.6억 → 2005년 11.0억 → 2006년 43.7억 → 2007년 112.9억 달러)

○ (경제의 잠재 성장 능력 약화) 투자부진, 신성장 에너지 고갈, 고령화에 의한 생산성 둔화 등으로 국내 경제의 잠재 성장 능력이 약화

- 투자 부진 :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 국내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9.6%에 달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의 기간 동안에는 4.7%로 급락
- 신성장 에너지 고갈 : 기술 혁신의 미흡으로 새로운 성장 에너지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 잠재성장률 하락 :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국내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음. 투자 부진, 교육·시장 경제 시스템의 낙후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여, 잠재성장률이 90년대 6.1%, 2000년대초 4.8%, 2010년대 4.0%로 낮아졌음

- (경제사회 갈등 심화) 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적응 능력 격차로 인해 산업·기업간 양극화와 고용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때 따라 경제 사회 갈등이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산업 기업간 격차 → 소득 고용 격차 → 혁신 기반(교육 인적자원 기술개발 등) 격차 → 산업 기업 격차 확대로 연결되는 악순환고리 형성
  - 이와 함께 삶의 질 욕구 증대, 수평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사회 전 계층과 전부문에서 분출되어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 '복합 갈등' 양상이 심화됨
  - 특히 사회적 갈등 조정 기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학연, 지연, 혈연, 직능 집단,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이 낮은 다양한 NGO에 의존한 이해관계의 주장이 지속될 전망
  
- (급속한 고령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한국은 세계 최고속의 고령화 진전으로 성장 능력 약화에 의한 성장률 하락이 예상
  - 빠른 고령화 속도 : 저출산, 평균수명 연장으로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인구 총인구의 7%)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 고령 사회(14%), 2026년 초고령 사회(20%)로 진입 전망
  - 성장 능력 약화 : 고령화에 따르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내수 침체를 통해 성장률을 하락시킬 우려가 존재하며, 사회보장비 증가,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의 급속한 악화 요인으로 작용
  
- (사회 문화적 변화 가속) 가족 구조 변화, 개인주의적 문화 확산, 다민족 사회 등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구성원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계속 다양화, 개성화되어갈 전망이다
  - 특히 기술과 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전과 다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지닌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고, 아시아계 근로자 급증, 국제 결혼 증가 등으로 다민족사회가 형성되고 있음
  
- (통일 비용 부각) 한반도 정세가 개선되면 남북한간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남북간 경제 통합화가 진전될 것이나, 남한 내부에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 남북 경제 통합화 진전 : 금강산, 개성 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 국민들의 관광 확대 등으로 남북 경제의 상호 의존 및 통합화가 진전됨
  - 통일 비용 부담 전망 :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SOC에 대한 투자 등 수천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현안으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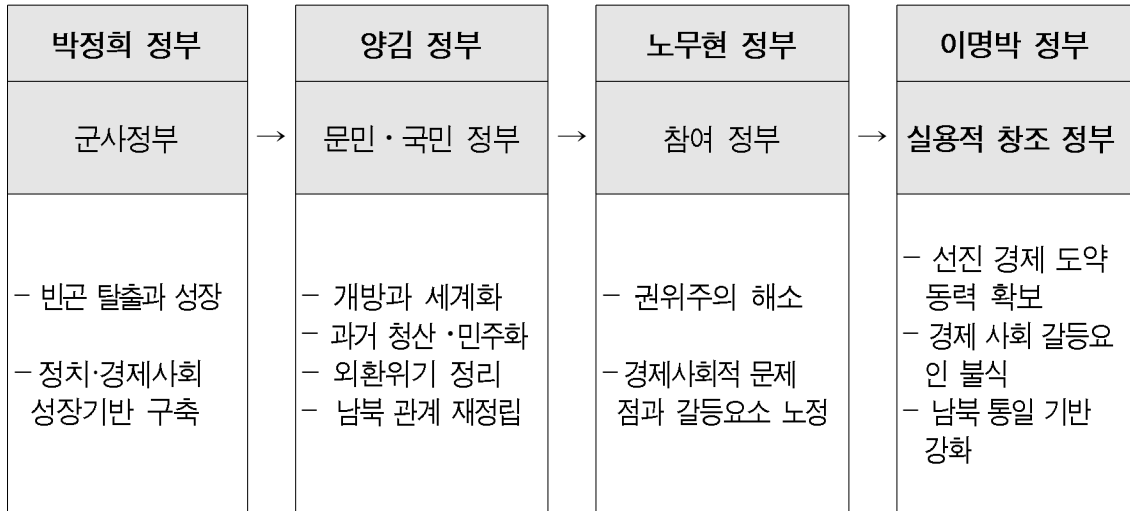
## 2. 경제 선진화 비전과 성장 잠재력

### □ 새 정부의 역사적 의의

#### ○ 21세기 새로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한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의 모색으로 한국 경제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

-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시대를 거쳐 선진 대국 진입을 위한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
  - 1960~70년대를 産業革命期, 1980~90년대를 市民革命期라 하고, 90~2000년대 초반을 외환위기 극복 등 구조조정기라 한다면 이제 선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의 시기임
- 경제 재도약 기반 확립
  - 외환위기가 20세기 경제 성장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하면, 21세기에는 새로운 성장 방식과 구조를 창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선진 경제로 진입하는 시기
- 세계 경제의 선도자로 부상
  - 산업사회에서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경제였지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동북아 경제와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선두주자로서 부상
- 화합과 조화의 새 시대
  - 20세기를 대립과 반목의 시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면, 21세기는 화합과 통일 시대
  - 지역간·계층간·세대간 화합, 생명 및 환경과의 조화 등
- 통일을 향한 새로운 남북 공생 시대의 창출
  - 통일을 향한 새로운 남북 관계를 형성하여, 20세기 분단 시대를 극복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를 청산
- 21세기 새로운 가치관 정립
  -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남북 공생 시대. 생명과 환경의 존중 등 시대적 변화에 맞는 21세기형 새로운 의식과 가치관을 창출

－ 역대 정부의 시대적 역할



□ 경제 선진화 비전과 성장 잠재력 확충

○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21세기 세계 경제와 동북아 경제를 선도하는 선진 한국 경제 구축

- 일인당 소득 3만 달러대 진입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 계층별, 지역별, 세대별 조화로운 발전과 환경문제 해소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 확립
- 남북한 상생 발전을 위한 경제적 기반 확보

○ 경제 선진화를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전략

- 경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 잠재력 확충이 절실
-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본 발전 전략
  - 지속 가능한 복지 증대를 위한 성장 전략 추구
  - 추종자에서 혁신자로 변화
  - 정부 주도에서 민간 기업 주도로의 완전 전환
  -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새로운 경제 철학과 가치관 정립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9대 분야 45개 핵심 정책 과제

9대 분야	핵심 정책 과제
(산업) 신성장동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산업의 첨단화</li> <li>· 新기술 산업 육성</li> <li>· 산학연 혁신 복합체 구축</li> <li>· 지역 특화 산업 창출</li> <li>·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li> </ul>
(금융) 금융입국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시장 안정화</li> <li>· 동북아 금융 허브 조성</li> <li>·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li> <li>· 금융산업 양극화 해소</li> <li>· 금융시장 감독 강화</li> </ul>
(공공 재정) 공공부문 효율성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li> <li>· 큰 시장 작은 정부 추구</li> <li>· 불필요한 정부 규제 철폐</li> <li>· 공기업 민영화 추진</li> <li>· 통상 외교 능력 제고</li> </ul>
(복지)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 대비</li> <li>· 연금 제도 개혁</li> <li>· 사회 서비스 확대</li> <li>· 사회적 약자(고령인, 장애인) 자립 기반 확충</li> <li>· 소득 양극화 해소</li> </ul>
(남북 관계) 지정학적 리스크해소와 동북아 특수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li> <li>· '신경협정책' 추진</li> <li>· 통일 인프라 구축</li> <li>· 남북 경협 활성화 재원 확충</li> <li>· 신경협사업 확대 추진</li> </ul>
(기업) 시장 경쟁 체제확립과 글로벌 스탠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 가치 경영 추구</li> <li>· 인수종 사업 개발</li> <li>· 글로벌 역량 강화</li> <li>· 노사 관계 선진화</li> <li>·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성장 지향</li> </ul>
(환경) 지속 가능 경제 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li> <li>· 경제의 지속 가능 발전 요소 강화</li> <li>·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체제 구축</li> <li>· 선진국의 환경 규제 및 국제 환경 협약 대응</li> <li>· 환경·에너지의 신성장 동력화</li> </ul>
(교육)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 교육 경쟁력 강화</li> <li>· 평생학습 활성화</li> <li>·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의 양극화 해소</li> <li>· 핵심 과학 인력 육성</li> <li>· 두뇌 유출 방지와 해외 우수 인력 활용</li> </ul>
(의식, 가치관) 사회 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화 의식 개혁</li> <li>·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 확립</li> <li>·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li> <li>· 법치 확립과 성숙된 사회질서 형성</li> <li>· 인권 신장과 삶의 질 개선</li> </ul>



## **Ⅱ.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현황**

- 1. 성장 잠재력 추이의 특징**
- 2. 성장 잠재력 하락의 원인**





## II.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현황

### 1. 성장 잠재력 추이의 특징

#### □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 ○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은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킴

- 특히 2003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발전 단계 상에 위치해 있는 동아시아 경쟁국들의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 2003~2006년 기간 중 동아시아 경쟁국들과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한국 4.3%, 대만 4.6%, 홍콩 6.6%, 싱가포르 6.6%를 각각 기록
- 한국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경기순환적인 측면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 또한 인구증가율 둔화와 고령화 진전, 저축률 하락 및 설비투자 부진 등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로 인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패턴은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생산가능연령인구의 빠른 증가에 힘입은 취업자 수의 추세적 증가와 높은 가계저축률은 그동안 한국경제가 양적인 투입위주의 성장패턴을 이어가는데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음
- 그러나 최근에 들어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가계저축률의 하락 등은 한국경제가 양적인 투입위주의 성장패턴을 유지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에 연평균 6.6%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에는 4.5%로 하락(현대경제연구원)

- KDI(2002)<sup>1)</sup>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과거의 한국 및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2003~2007년 기간 중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을 4.8~5.4% 수준으로 추정
- 한국은행(2005)<sup>2)</sup>은 2005~2014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이 4.6%(중립적인 전망)에 달할 것으로 전망

1) KDI,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 2003~2012」, 2002. 12.

2) 한국은행,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2005. 8.

## 2. 성장 잠재력 하락의 원인

### □ 노동 투입량과 생산성 저하

○ 통계청에 의하면 2006년 7월 1일 기준 총인구(장래추계인구)는 4,829만 7천 명으로 전년대비 0.33% 성장한 것으로 드러남

- 2005년 합계출산율<sup>3)</sup>은 1.08명으로 1983년에 대체출산율(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합계출산율, 2.1명) 수준까지 낮아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출산율 둔화로 인하여 유년인구 비중(2006년 현재 0~14세 비중 18.6%)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9.5%)는 계속 높아져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직후 크게 낮아진 후 다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 또한 한국의 학력수준은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 및 사회적 활용도는 낮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한편 이전과 같은 저비용에 의한 높은 노동 생산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3위를 기록

·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의 52%, 일본의 75% 수준에 불과

· 특히 급속한 고령화 현상의 진전으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3)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

□ 자본 투입 축소

○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급락은 국내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존재하던 투자 여력도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인 자본 축적이 정체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 국내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9.6%에 달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의 기간 동안에는 4.7%로 급락
-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 비중은 13.4%에서 9.9%로 하락함
  - 반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26.3억 달러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56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 (2006년 109.3억 달러)

< 설비투자 및 해외투자 관련 지표 추이 >

	1980년대	1991~97년	1998~2006년
실질설비투자 증가율 (%)	8.5	9.6	4.7
명목설비투자/명목GDP (%)	13.1	13.4	9.9
해외투자 (억 달러)	3.2	26.3	56.0
해외투자/명목설비투자 (%)	1.5	4.3	9.8

자료 :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주 : 기간중 연평균임.

○ 인구 고령화 심화와 유동성 제약의 완화로 인한 저축률의 하락은 궁극적으로는 자본스톡 증가율의 하락과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짐

-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보여주는 순저축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2000년 기간 중 평균 16.1%를 기록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1~2006년 기간 중 순저축률 평균은 4.2%에 머물러 있음
-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축률의 저하가 설비투자 부진의 주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저축률의 저하가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잠재성장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R&D 투자의 저효율성

- 경제발전 단계에서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인적자본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게 되고 이는 무형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져 총요소생산성<sup>4)</sup>의 증가율이 상승국면을 맞이하게 됨
- 한국은 지난 90년대부터 연구개발을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R&D 투자규모를 꾸준히 증대시켜 왔음
  -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간 중 설비투자가 전반적인 정체국면을 나타낸 와중에서도 연구개발투자는 규모 면에서 꾸준히 증가해 옴
    - 이와 더불어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9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2.9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OECD국가 중 상위권 수준임
- 그러나 이러한 R&D 투자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상대적 투자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GDP대비 3극 특허건수<sup>5)</sup>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의 GDP대비 3극 특허건수는 2003년 현재 0.8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1.8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음

□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하락

- 자본과 노동 투입 이외의 성장 요소라 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이 지속적으로 낮아짐

---

4) 총요소생산성이란 생산함수식에서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잔차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개발, 인적자본, 대외개방 효과, 금융 및 노동시장의 효율화 등 여러 요인들의 기여분이 합산되어 있는 것임.

5)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에 모두 등록된 특허 건수

- 총요소생산성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됨
- 총요소생산성은 1981~1990년 3.0%에서 1991~2000년 2.2%, 2001년~2005년 1.7%로 점차 하락세를 나타냄

### ○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는 기술 개발과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의 제도 혁신을 통해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 우선 규제 혁신을 하는 것임. 규제는 시장 효율성을 낮추어 생산성을 낮추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로 작용함
- 두 번째는 국내 R&D 투자를 늘리고 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세 번째는 교육 혁신을 통해 인적 자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함
- 네 번째는 제도와 문화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함. 상생의 노사 관계 형성, 법치주의 확립 등으로 투명한 정치 사회 기업 시스템 구축, 합리주의적이며 개방적인 가치관과 의식을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 등이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임

### ○ 특히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함

-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는 주요 선진국의 2.5~8.0배,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격차는 1.5~7.0배에 달함
- 또한 이 같은 생산성 격차로 2000년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에 비해 0.7%포인트 정도 둔화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함
-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도 각종 규제 완화가 시급한 과제임. 세계은행은 한국 서비스업의 법적 진입 장벽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28위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함



### Ⅲ.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

1. 산업 : 신성장 동력 확보
2. 금융 : 금융입국의 실현
3. 공공재정 : 공공 부문의 효율성 제고
4. 복지 :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
5. 남북관계 : 지정학적리스크 해소와 동북아 특수 창출
6. 기업 : 시장 경쟁 체제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화
7. 환경 : 지속 성장 가능 경제 체제 확립
8. 교육 :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적 자본 육성
9. 의식 가치관 : 사회 갈등 해소 및 국민 통합





### III.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

#### - 9대 분야 45개 핵심 정책 과제

#### 1. 산업 : 신성장 동력 확보

##### □ 개요

##### ○ (현상)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부진, 원천기술 확보 부족, 서비스산업 경쟁력 취약 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부진 : 신성장동력 분야 관련 국가 예산은 2007년 기준 전체 예산의 0.35%인 4,400억 원에 불과해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가 부진
- 기업 투자 부진 : 한국의 투자는 미국 4.8%, 영국 4.5%, 독일 4.1%, 일본 8.8% 등 선진국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진입 시 기록한 설비투자 증가율에 못 미치는 3.8%에 불과한 실정. 특히 그동안 국내 설비투자를 이끌어 왔던 IT 산업의 설비투자가 저조한 등 기업 투자가 부진한 실정
  - IT 산업 설비투자 부진 : IT 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2005년(-3.6%), 2006년(-4.3%)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부진, IT 산업의 국내 전체 설비투자 비중 또한 2004년 57.1%에서 2006년 40.9%로 급락
- 원천기술 확보 부족 :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인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선진국보다 열악. 이에 따라 원천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기술무역 수지 적자 폭이 확대
  - 기초연구 투자 열악 :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한국은 2005년 15.3%로 미국 18.4%(2004년), 프랑스(2003년) 24.1%, 영국 34%(2003년)에 낮은 수준
  - 기술무역 수지 적자 폭 확대 : 한국의 기술무역 수지적자 규모는 1996년 22.2억 달러에서 2005년 29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
- 고급 두뇌 유입 부족 : 지식기반경제 경쟁력의 근원인 고급 인적자원의 공급 부족으로 국가 지식경쟁력, 산업 경쟁력 등의 악화 원인으로 작용

· **두뇌유출지수 악화** : IMD가 매년 발표하는 두뇌유출지수가 한국은 1995년 7.53으로 비교 대상 48개국 중 4위에서 2007년에는 5.89로 비교 대상 55개국 중 19위로 하락

※ 두뇌유출지수 : 고급 두뇌들의 해외 진출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10에 가까울수록 고급 두뇌들의 해외 진출 경향이 약함

· **순두뇌유입 비율 악화** : 한국은 오히려 동기간 순두뇌유입 비율이 -1.3%에서 -1.4%로 0.1%p 악화되는 등 고급 두뇌 수급이 악화되고 있음

※ 순두뇌유입 비율 : 국내 거주 외국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 수에서 해외 거주 국내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 수를 제외한 값을 25~65세의 국내 노동인구로 나눈 값

- **취약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 탈공업화의 진전 뿐 아니라 제조업 지원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준

·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한국의 전산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5.9%에 불과

· 이는 저조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때문인데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할 때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54.8에 불과

○ (문제점) 신성장동력 부재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 등 지속적인 성장 가능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등 개도국에는 따라잡히고 선진국과는 기술격차가 벌어지는 한국경제의 '샌드위치 현상' 심화

- **잠재성장률 저하** : KDI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제도의 질 및 대외 개방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03~2007년 4.8%에서 2008~2012년 4.5%로 하락할 전망

- **국가 경쟁력 하락** : IMD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중위권에 머물고 있고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도 밀리고 있는 실정

· IMD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3년 32, 2004년 31위, 2005년 27위, 2006년 32위, 2007년 29위로 조사대상 국가들 가운데 중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더욱이 국가경쟁력은 2007년 기준 중국 15위, 대만 18위, 말레이시아 23위, 인도 27위 등으로 아시아 개도국들에게조차 밀리고 있음
- **한국 경제의 샌드위치론 대두** : 선진국엔 기술력, 후발국엔 가격 경쟁력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흥 개도국들이 급부상하는 등 한국의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
  - **선진국과의 기술력 차이 존재** : 세계 핵심기술 보유 비중을 보면 미국 56%, 일본 32%, 한국 1%로 핵심기술 확보가 미흡한 수준
  - **신흥 개도국들의 부상** : 한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BRICs 국가들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등 신흥 개도국들이 급부상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상품의 입지 약화 우려가 고조
- **(해결 과제) 기존 산업의 첨단화, 신기술 산업 육성, 제조업 기반 산업 특화, 산학연 혁신 복합체 추진 및 활성화, 지역 특화 산업 창출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
  - **기존 산업의 첨단화** : 기존 제품의 고도화, 부가가치 구조의 고도화, 생산 및 조달 네트워크의 고도화의 3高 전략 추진
  - **신기술 산업 육성** : 정책 추진 체계 혁신, 산업화 혁신, 투자 환경 혁신, 경쟁 전략 혁신의 4新 전략 추진
  - **산학연 혁신 복합체 추진 및 활성화** : 산학연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지역 대학의 산업적 기능 강화, 인프라 강화의 3強 전략 추진
  - **지역 특화 산업 창출** : 산업·기술·비즈니스의 융합 추진, 지역산업의 특화도 제고, 지역 금융 활성화, 지역의 활력 활용을 통한 지역 특화 산업 창출
  -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 육성 전략의 차별화, 개방화·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역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

## 1) 3高를 통한 既存 産業의 尖端化

### □ 필요성

○ 그동안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어 왔던 IT 산업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기계, 조선, 자동차, 철강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산업경쟁력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급성장 등 리스크 요인 또한 상존

- IT 산업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하락 : IT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17.5%에서 2006년 13.3%로 하락
-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급성장 : 중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시장에서의 對 한 국 비교우위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06년 기준 섬유제품, 완구, 가구 등은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넘었고 산업용 전자제품 35.7%, 가정용 전자제품 39.8%, 충전기기 32.4% 등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높은 실정임
- 한편, 전통 산업의 제품, 공정, 유통 등 모든 부분에 걸쳐 IT기술이 결합되는 디지털 수렴(Digital Convergence)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전통 산업의 디지털화 혁신이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BT, NT 등 신기술 융합에 의한 상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 기본 방향

- **제품의 고도화** :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개도국의 추격을 회피하기 위한 기존 제품의 고도화 전략을 실현
- **부가가치 구조의 고도화** : 과거에는 양질의 싼 제품의 생산 능력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었다면 최근에는 R&D, 제품 디자인 등이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부가가치 구조의 고도화 추진이 필요함
- **생산 및 조달 네트워크의 고도화** : 기업의 비용 절감,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 新시장 개척 등을 위한 생산 및 조달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추진

□ 세부 정책 과제

○ **제품의 고도화** : IT, BT, NT 등 신기술 융합 제품이나 미래형 첨단 제품 개발 강화, 전통 제조업의 첨단화 지원 등을 통해 제품의 고도화를 꾀해야 함

- **IT, BT, NT 등 신기술 융합 제품 개발 촉진** : 신기술 융합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가칭 ‘융합기술 사업화 전략단’의 구성, 신기술 융합 제품의 정부 조달 강화, 신기술 융합 제품에 대한 R&D 세제의 한시적 우대 조치 도입, 신기술 융합 제품의 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
- **미래형 첨단 제품 개발 강화** : 초고선 여객용 선박,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형 첨단 제품 개발 강화를 통한 기존 제품의 고도화로 新시장을 개척
- **전통 제조업의 첨단화 지원** : 지역 거점형 ‘제조혁신연구개발코어’(대만 타이난 과학기술공업단지에 ‘산학혁신연구개발시범구역’을 건설, 전통 제조업의 혁신연구개발 전환을 지원) 조성 등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첨단화를 지원

○ **부가가치 구조의 고도화** : R&D, 디자인, 기술경영 등 기존 산업의 소프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가가치 구조의 고도화를 실현

- **R&D 강화** : R&D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제 폐지(미국 2004년, 일본 2003년 등), R&D 관련 병역특례요원의 중소기업 우선 지원 등 기업의 R&D 투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디자인력 강화** : 기업 디자인 부문의 위상 정립, 디자인 결정 프로세스 중시, 전사 디자인 담당 조직 통합, 新아이디어와 우수 인재 확보 노력 등을 통해 디자인력 강화(닛산과 삼성의 디자인 경영)
  - **기술경영 능력 배양** : 기술경영 대학원의 활성화 및 기업의 기술경영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내부 지적자산의 비즈니스화 촉진
- \* 일본의 은퇴 또는 현장의 숙련 고급 기술인력 유치·활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또는 한계기업들의 기술경영 능력 배양

- **생산 및 조달 네트워크의 고도화** :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글로벌 부품·소재 조달 네트워크 참여 등을 통해 생산 및 조달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도모
  -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 : 동남아시아 등 우수 인재와 대규모 시장 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대해 단순·조립이나 저급 기술 제품 등의 생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제품과 부품·소재의 新시장을 확보
  -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 ①부처 통합에 의한 종합 육성 체제 수립[일본 경제산업성(METI) 산하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IST), 문부과학성 산하의 물질·재료연구기구(NIMS)] ②선행-응용-사업화 연계 패키지형 기술개발 프로그램 개발이나 소재정보은행(Material bank)과 기술지원센터(Solution center) 활성화 등 차별화된 소재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③산산 협력 시스템 강화 ④가칭'소재(생산기반기술)전문펀드'등 자금 형성을 통한 사업화 촉진 ⑤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금융 지원(자녀 교육비 보조, 연말 정산 공제 확대, 자사주 부여 등)이나 고령 기술 인력 고용 지원 등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인센티브제를 확대
  - **글로벌 부품·소재 조달 네트워크 참여 촉진** : ①對 글로벌 기업 부품·소재 조달기업에 대한 수출 관세 우대 ②對 글로벌 기업 부품·소재 조달 마케팅 종합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국내 부품·소재 기업 지도 작성 및 홍보 강화 ③對 글로벌 기업 부품·소재 조달 마케팅 비용 지원 ④對 글로벌 기업 부품·소재 판매 투어 실시 ⑤對 글로벌 기업과의 부품·소재 개발 공동연구 지원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부품·소재 조달 네트워크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책 강구

## 2) 4新을 통한 新技術 産業 育成

### □ 필요성

- 섬유, 신발, 가전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 점차 선진국에서 신흥개도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동차나 조선 등 중후장대형 산업도 선진국 간 경쟁 심화에 이어 개도국들의 참여 가속화로 경쟁이 치열
  - 일본‘신산업창조전략’, 미국‘ATP(첨단기술개발 프로그램)’, 대만‘양조 쌍성계획’, 독일‘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등 선진 각국은 물론 경쟁국들 또한 新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임
  - 따라서 IT, BT, NT 등 新기술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이 향후 국가 및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

### □ 기본 방향(전략)

- 정책 추진 체계 혁신 : 각 부처별 新기술 육성 전략의 범정부 차원의 조정 및 추진, 新기술 관련 정부 R&D사업의 연계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중앙과 지방 정부의 新기술 산업 육성 전략의 연계 강화 등 정책 추진 체계의 혁신을 통한 新기술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산업화 혁신 : 기초·원천 기술 투자 강화를 통한 대학발 기술 벤처 활성화, R&D와 사업화의 연계 강화, R&D나 생산 기술 등 관련 고급인재 확보 지원, 新기술 산업 금융 활성화를 통한 산업화 혁신
- 투자 환경 혁신 :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기업 규제 완화, R&D 세제 개선 등 기업 투자 환경의 혁신
- 경쟁 전략 혁신 : 국가적인 지적재산전략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지원, 중소·벤처, 중소기업 간, 벤처기업 간 협력 지원, 국가 간 코퍼티션 전략 마련 및 지원 강화 등 경쟁 전략의 혁신

□ 세부 정책 과제

○ 정책 추진 체계 혁신

- 각 부처별 **新기술 육성 전략의 범정부 차원의 조정 및 추진** : 국가 과학기술전략을 중심으로 한 新기술 산업 육성 전략 매트릭스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발전 전략과 新기술 산업 육성 전략과의 연계 강화가 시급함
- **新기술 관련 정부 R&D사업의 연계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新기술 관련 정부 R&D 사업 지원단’ 등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新기술 관련 정부 R&D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너지 효과를 강화
- **중앙과 지방 정부의 新기술 산업 육성 전략의 연계 강화**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新기술 산업 육성 전략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집행 예방, 중앙과 지방 정부간 시너지 효과 강화, 新기술 산업 육성 기간 단축 등을 꾀해야 할 것임

○ 산업화 혁신

- **R&D와 사업화의 연계 강화** : 기초·원천 기술 투자 강화를 통한 대학발 기술 벤처 활성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창업 진흥(독일 연방경제기술부는 ‘과학으로부터의 창업 프로그램’)을 위해 대학의 인큐베이터 시설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등 ‘종합창업지원센터’화할 필요가 있음
- **新기술 산업 금융 활성화** : 新기술 창업 기금(독일 첨단기술창업기금) 마련, 기업의 지적자산 평가를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적자산평가펀드 마련, 新기술 산업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할인이나 융자 시 이자 할인 등 新기술 산업 투·융자 우대 등 新기술 산업 금융 활성화를 통해 新기술의 산업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임
- **新기술 산업화 인재 양성** : 이공계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경영 교육 무상 지원, 미국의 장학생 제도와 같이 국내 이공계 기술인력에 대한 ‘新기술창업 장학생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우수 이공계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창업을 전제로 무상의 학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타 우수 인력 또는 창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장학금 제도 : 학교, 각종 재단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scholarship), 이자를 연방정부가 지불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비 융자(Federal loans to students)로 이자를 연방정부가 지불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뉨. 마지막으로 사적인 대출(Private loans)이 있음

#### ○ 투자 환경 혁신

-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 최저자본금 철폐(일본 최저자본금 규제 철폐, 2005년), 대학 등 신기술 개발 기관의 법인 설립 관련 규제 철폐 등 획기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함
- **기업 규제 완화** : 출자총액규제 철폐(일본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 제도, 2002년), 수도권 규제 완화(일본 공장등제한법 폐지 2002년, 공장재배치촉진법 폐지 2006년), 환경규제의 현실화 등 기업 규제 완화 필요
- **R&D 세제 개선** : R&D 관련 조세지원제원의 일몰제 폐지(미국 2004년, 일본 2003년 등), R&D 관련 병역특례요원의 Inno-Biz나 벤처 기업 우선 지원 등 기업의 R&D 투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 경쟁 전략 혁신

- **국가적인 지적재산전략 구축** : 미국의 경우 Bayh-Dole법(1980년), The young Report(1985년), 슈퍼 301조(1988년), 비즈니스모델 특허 심사기준 작성(2000),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대장 및 지적재산기본법(2002년),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2003년) 등 선진국의 경우 국가적인 지적재산전략을 구축하여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고 있어 한국 또한 국내 지적재산권 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적인 지적재산전략을 구축하여 新기술 관련 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지원** : 대기업 유희 지적재산권 DB 구축 및 중소기업 이전 시스템 구축, ‘기업 상생 종합협력 기금’ 구성을 통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협력 R&D 또는 협력 사업 지원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지원
- **경쟁 상대의 활용** : 일본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강화 및 중복 新기술 분야 투자 협력 강화를 통한 일본의 경쟁력 활용, 일본의 新기술 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통한 인적자본 경쟁력 강화 등 경쟁 상대의 활용 전략 마련 필요

< 주요 경쟁국의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 현황 >

구분	사업명	추진기관	선정기준	중점추진분야
미국	첨단기술개발프로그램	N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수준의 제품, 서비스, 산업공정 등의 개발기회 제공 분야</li> <li>- 산업체 전반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li> <li>- 정부와 산업계의 협조에 의한 투자로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줄여 줄 수 있는 유망기술</li> </ul>	첨단소재·화학, 생명공학, 전자·통신, 정보기술, 제조
일본	신산업 창조전략	경제산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군</li> <li>- 사회니즈에 대응하는 산업군</li> </ul>	연료전지, 콘텐츠, 정보가전, 로봇,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비즈니스지원
대만	양조쌍성계획	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지속적 발전 강화</li> <li>- 양질의 과학기술창의력 및 우수한 사회응용환경을 활용한 유망산업 발전</li> </ul>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콘텐츠, 생명공학
독일	첨단기술전략프로그램	범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래의 시장에 있어서 독일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술 분야</li> </ul>	나노, 바이오, 미세시스템, 등 10개 관련 기술, 서비스
영국	연구회 지원 프로그램	무역산업부 (8개 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의 국가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집중적인 연구개발투자 분야</li> </ul>	생명과학, 에너지, 보건 의료, 자연환경, 기반분야
핀란드	무역산업부 지원 프로그램	무역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용중점영역: 시장수요가 큰 분야</li> <li>- 기술중점 영역: 시장 및 고객지향의 분야와 새로운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용중점영역: 제품과 서비스 모델의 경쟁, 환경과 에너지, 보건과 복지, 보안(방위)와 안전, 노동과 여가</li> <li>- 기술중점영역: 정보통신, 생명공학, 소재, 나노, 사업능력과 사업개발</li> </ul>

자료: 안승구, 이부형 외, 『주요경쟁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 추진현황(Ⅰ): 미국, 일본, 대만, 독일, 영국, 핀란드를 중심으로』, KISTEP, 2007년.

### 3) 3強 전략을 통한 產學研 革新 複合體 구축

#### □ 필요성

○ 최근 기술의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 등으로 기업, 정부, 대학 등 연구기관 등 기술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개별 기관의 능력만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선진각국들은 산학연 혁신 복합체 활성화를 통해 혁신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산업 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선진 각국들의 산학연 혁신 복합체는 양질의 투자와 고급 인재 유입 가속화 실현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산학연 혁신 복합체의 활성화의 성패 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임

#### □ 기본 방향

○ 산학연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산학연 혁신 복합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참여자의 교류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 및 강화가 전제 조건임

○ 지역 대학의 산업적 기능 강화

- 지역 대학은 산학연 혁신 복합체의 주체로 이들의 연구 기능을 산업적 기능으로 전환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

○ 산학연 혁신 복합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 산학연 혁신 복합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 비즈니스 지원 인프라 등 다양한 인프라의 강화가 필요

□ 세부 정책 과제

- 산학연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온라인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인재교류 촉진 등을 추진
  - 온라인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 기술·인재 조달 정보망 구축, 산학연 교류 종합 정보 제공, 산학연 R&D 플랫폼 제공 등 온라인 산학연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산학연 인재 교류 촉진 : 산학연간 직무 교환, 공동 연구 등을 활성화
    - 독일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교환과정 경쟁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경험 교환 추진을 위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과학기술자들의 산업계 파견 근무를 허용하는 'PRP INNO II'를 운영
    - 프랑스는 대학교수 및 공립 기관의 연구자가 공무원으로서 기업 내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파트타임 고용을 인정하는 한편, 기업에 속한 연구자들도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수업이나 연구 활동 참가가 가능하도록 함
  
- 대학의 산업적 기능 강화 : 대학의 인큐베이션능력 제고,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기관화 촉진 등 대학의 산업적 기능을 강화
  - 대학의 인큐베이션능력 제고 : 일본은 '대학발 벤처 1,000개사 계획', 대만은 '기술창업형대학육성센터' 등 대학의 인큐베이션 능력 제고를 통한 대학발 起業의 증대를 통해 대학의 산업적 기능을 강화
  - 대학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기관화 촉진 : 프랑스의 경우 2005년에 도입된 新예산법에 따라 대학이 스피노프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의 투자기관화를 촉진
  
- 산학연 혁신 복합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의 생활 인프라 강화를 통한 인재 유입 및 정착율 제고

4) 地域 特化 産業 創出

□ 필요성

○ 국가 경제 및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중소기업 및 지역 경제의 침체는 곧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야기하며, 지역산업의 혁신이 정체될 경우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선진 각국들은 산업클러스터 정책, 지역혁신정책 등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투자 유치 노력 강화로 지역 특화 산업을 창출하여 지역산업재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 특화 산업 창출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지역 간 균형 발전, 사회 안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임

□ 기본 방향

○ 산업·기술·비즈니스의 융합 추진

- 지역 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역의 산업, 기술, 비즈니스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지역산업의 특화도 제고

- 지역 산업 특화를 통한 차별화 및 특성화 달성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투자, 인재 육성 등 지역산업 특화 전략이 차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지역 금융 활성화

- 지역 특화 산업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역 금융 활성화 전략이 필요

○ 지역의 활력 활용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전략은 우선 지역의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및 소득의 증대가 목표이므로 지역의 활력을 활용함으로써 참여도 제고, 지역 주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

□ 세부 정책 과제

- **산업·기술·비즈니스의 융합 추진** : ‘향토자원개발 및 융합비즈니스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 주력 전략 산업과 新기술의 융합 등을 통해 산업·기술·비즈니스의 융합 추진
  - ‘향토자원개발 및 융합비즈니스지원법’ 제정 : 역사적 유산과 천연 자원 등 향토자원개발을 통한 지역 특화 산업 개발 촉진, 향토자원과 관광·레저 등 서비스 산업 개발, 향토자원과 제조업의 융합 등 융합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
  - 기존 주력 전략 산업과 新기술의 융합 : 섬유+나노+바이오, IT+바이오, 자동차+바이오, 철강+나노 등 기존 주력 전략 산업과 新기술의 융합 촉진을 통한 기존 주력 전략 산업의 고도화 추진
  
- **지역산업의 특화도 제고** : 지역전략산업 조정, 지역집적 유도를 통한 클러스터 육성, 지역인재 육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특화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지역전략산업 조정** : 지방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 특화 산업이 新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중복 추진되고 있어 우선 이의 국가적인 조정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제고시켜야 함
    - 중복 분야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세부 분야를 육성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간 상보성을 높여 시너지를 극대화
  - **지역집적 유도를 통한 클러스터화 추진** :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종합입지 지원조례’ 등을 마련하여 기존 클러스터와의 연계 전략 구축 등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의 지역집적을 유도
  - **지역인재 육성** :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대학 등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설치 및 인재 공급 지원 방안 마련, 지역 기업과 교육기관의 인턴십 강화 등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를 육성

- **지역 금융 활성화** : 지역 금융의 평가능력 제고, 지역 금융 인프라 개선 등의 전략을 통해 지역 금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특화 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
  - **지역 금융의 평가 능력 제고** : 지방 정부, 금융기관, 평가회사 등 지역 금융 담당 기관 및 기업 평가 경험자들로 구성된 가칭‘지역금융평가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기업 평가 능력 제고로 지역 금융의 원활한 흐름을 조성
  - **지역 금융 인프라 개선** : 지역 금융 기관의 인재 육성, 지역 금융 거래의 상 관행 개선, 자산처분을 위한 지역자산처분시장의 정비 등 지역 금융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
  
- **지역의 활력 활용** : 지방 정부의 역할 제고,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도, 만족도, 사업성과의 최대화를 꾀해야 할 것임
  - **지방 정부의 역할 제고** : 지역 특화 산업은 지방이 처한 산업적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 등이 타 지역과 차별적이어서 지원 자금, 관련 규제 등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권한 강화가 필요
  - **중앙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 반면 지방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적절한 정책 수행 평가 등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견제
  -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 : 한편 지역특화산업의 혜택의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가칭‘관민지역특화산업활성화촉진위원회’등의 기구를 마련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지방 정부가 이를 보조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 5) 서비스 産業의 선진화

### □ 필요성

○ 한국경제는 선진국 따라잡기형의 수출 중심 제조업 주도의 성장을 이룩해왔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로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한 고용을 동반한 성장으로의 경제구조의 전환이 필요

- 더욱이 최근의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금융,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시급
  - 1999~2005년간 제조업에서는 67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 산업에서는 약 64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
- 한편, 한·미, 한·EU FTA 등 대외 개방 가속화 대응 뿐 아니라 최근에는 서비스수지 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등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 기본 방향

#### ○ 육성 전략의 차별화

- 서비스산업은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업종별로 성장 잠재력, 경제 기여도, 고용 창출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어 육성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

#### ○ 개방화·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FTA 가속화로 인한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와 영세 서비스업체들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

#### ○ 지역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 고령화 진전 등에 따르는 생활지원서비스 수요의 증대, 지역 산업에 대한 금융, 법률, 회계 등 비즈니스 서비스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

#### ○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 확충

- 각종 제도, 정책, 시장 환경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업의 산업화 기반을 강화



□ 세부 정책 과제

- **육성 전략의 차별화** : 경쟁력 육성 산업군, 경쟁력 유지 산업군, 경쟁력 개선 산업군 등으로 육성 대상 서비스 산업을 차별화
  - **경쟁력 육성 산업군** : 성장성과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한국의 잠재력도 높으나 현재 경쟁력이 낮은 비즈니스서비스, 문화·오락 등은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비즈니스서비스의 경우 글로벌 인재확보, 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등을 추진하고, 문화·오락의 경우 관광클러스터의 개발, 한류의 지속화 등을 통해 동북아 문화관광 허브 지향
  - **경쟁력 유지 산업군** : 현재 경쟁력이 높고 잠재력 또한 풍부한 통신, 물류 등은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 통신분야는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서비스를 조기 실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물류분야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T기술 등을 활용한 물류혁신을 도모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교통인프라 등의 SOC에 대한 투자가 필요
  - **경쟁력 개선 산업군** : 영세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전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등은 대형화·산업화 유도
    -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프랜차이즈화·전문화 지원, 음식·숙박의 경우 한국적 특징을 유지하되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음식·숙박문화 개발
- **개방화·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의료산업, 교육·법률서비스 시장은 개방화를 통해, 영세 숙박업체 등 소규모 업체들의 대형화 유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의료산업 개방화** :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해외관광객 유치 및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의료비자 발급, 공공의료기관 경쟁시스템 도입 등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교육·법률서비스 시장 개방화** : 교육서비스 시장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외국의 우수대학을 한국에 유치하여 해외유학생의 국내 소비 유도, 법률서비스 시장은 법률시장 개방(외국 로펌의 한국내 영업허용)에 대비하여 로펌의 대형화·전문화 추진
- **소규모 업체들의 대형화 유도** : 소규모 숙박업체들의 연합 고유브랜드 개발,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종합중소기업으로의 성장 유도 등 소규모 자영업체들의 대형화 유도

○ **지역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 요양서비스, 대형 고급병원, 의료 관광, e-Health 등 생활지원형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지역 산업 밀착형 비즈니스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 확충** : 정부 지원 체계의 통합,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개혁, 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체제 구축, 업종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

- **정부 지원 체계의 통합** : 서비스산업의 광범위함 때문에 각종 지원정책 또는 국가 전략이 각 정부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가칭'범정부종합서비스지원 포털'구축
  - 가칭'서비스산업혁신전략추진단'등 정부 지원 체계의 통합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효율성, 정부 부처간 시너지 강화를 유도
-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개혁** : 레저, 문화, 관광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진입장벽 해소, 창업활성화, 발전저해요소 완화 등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
- **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체제 구축** :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은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한 국가적인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체제 구축이 시급함
- **업종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 레저·요식 전문 인력, 건강컨설팅, 웹디자이너, 개인 자산 종합 관리 등 라이프플래너 등의 업종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2. 금융 : 금융입국의 실현

### □ 개요

○ (현상) 최근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경제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산업경제를 제치고 금융경제가 세계를 리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에서의 '중국 충격'에 대응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으로 금융 허브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 (문제점) 국내 금융시장은 현재 금융자본주의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 가중,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미흡, 금융산업의 양극화 진행 가속, 자본시장 발전 미비, 금융기관의 리스크 고조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진입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인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허브 구축이 시급하지만 현재 상당히 늦게 진행되고 있음
- 개인의 자산 중 금융 자산에 비해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은행업과 비은행업 간 괴리 증폭 등 금융 관련 제분야에서 양극화가 심각함
- 간접금융시장에 비해 자본시장의 육성이 미비하여 국내 투자은행 부문의 실적에서 외국계 투자은행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바젤Ⅱ, RBC, 자본시장통합법 및 한미 FTA와 같은 국제 기준에 의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

- (해결 과제) 유동성 조절 능력, 외환 정책 제고, 동북아의 금융허브 구축,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원 체제 확립,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감독 강화 및 리스크 관리 경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금융한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
  - 국제 자본 이동에 대한 과잉유동성 대비 및 외환 정책의 효율성 제고
    - 과잉유동성 조절 능력 육성,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대비, 외환 정책 유효성 강화, 한중일 국제적 공조 강화, 기업의 환리스크 방어 능력 증대 등에 의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시킴
  - 동경, 홍콩에 이어 세계 3위의 거래소를 가진 국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금융의 국제적 연계성 강화, 시급한 경제 자유도 개선, 금융하부구조 구축, 국내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경쟁력 제고, 원화의 국제적 노력 등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
  - 금융자산 확보, 비은행권 육성,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 내국인의 금융산업 지배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개인들의 금융자산 확보,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 차별적 미시적 서민금융 시스템 확충, 중소기업과의 관계금융시스템 확립, 내국자본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 양극화를 완화해 나감
  - 글로벌 투자은행을 육성함으로써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시장을 탈피하며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허용, 자산운용시장 육성, 금산분리법 완화 검토, 우수한 금융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의 핵심인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감독 기준 강화와 감독기구의 개혁,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기반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국책 금융기관을 개편하고, 감독기구의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에게는 리스크 관리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함

## 1) 금융시장 안정화

### □ 필요성

#### ○ 산업경제를 제치고 금융경제가 세계를 리드하는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도래

- 파이낸셜타임스는 금융시장의 급팽창과 새로운 상품 출현이 글로벌화 바람을 타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만들어 가는 최근의 경제 양상을 '신자본주의 (The New Capitalism)'라고 명함
- 신자본주의는 금융자산의 급팽창, 금융의 거래지향성 확산,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헤지펀드·사모펀드의 급속한 성장, 금융의 세계화 심화와 같은 특징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 향후 국제무대에서 대형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팽창한 자산 규모를 기초로 기업의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임

- 1995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2배에 달하던 금융자산이 2005년 약 3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금융자산 규모가 급속히 확대
- 팽창한 자산 규모를 기초로 기존 기업의 인수·합병이 증가함으로써 세계 산업의 지형도가 바뀔 전망

### □ 기본 방향

#### ○ 과잉유동성에 대한 대처와 헤지펀드 등의 출현으로 인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

- 국내의 과잉 유동성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개척이 필요
- 국제 자본 이동에 의한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대비한 대책 수립 추진

#### ○ 외환 보유고에 대한 사용 방향 설정과 위험 관리가 요구

- 외환보유고를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환율에 대한 조정을 추구하도록 함
- 국제 자본 이동을 통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

□ 세부 정책 과제

○ 과잉유동성의 투자처 개척

-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시장에서 탈피하여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으로 확대
- 개인들이 선호하는 우량 벤처기업들을 선별하여 펀드를 구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

○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

- 외국인 투자자의 발언권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이용한 공격적인 M&A 전략 구사에 대비, 연기금과 생명보험 등을 통한 토종 사모펀드의 인가 및 육성이 필요<sup>6)</sup>
- 출자총액제한제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 제도 등을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축소하여 국내 산업자본의 대항 능력을 제고

○ 외환 정책의 유효성 강화

- 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 및 통화 다극 체제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 및 무역결제 통화의 다변화 추진
- 은행의 외화자금 만기불일치 현상이 완화되도록 조절함으로써 단기외화차입 부족에 의한 리스크를 대비하도록 함

○ 한중일 국제적 공조 강화

- 한중일 간의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달러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리 차이를 이용한 국제 자본의 공격에 대비
- 미국 및 유럽 등의 헤지펀드 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금융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등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한중일 국제적으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함

○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증대

- 환위험을 피할 수 있는 선진 헤지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및 전문가 육성이 필요
- 정부는 투기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입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뿐 아니라 위기관리 계획이 필요

---

6) 헤지펀드의 경우 2012년에 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임

## 2)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

### □ 필요성

- 제조업에서의 '중국 충격'에 대응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 차원에서 금융허브 구축이 시급
  -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허브 구축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을 3만~4만달러 국가로 만들자는 구상
-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금융허브는 현재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늦으며, 이대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힘든 상황
  - 정부는 지난 2003년말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마련한 후, 2012년 서울을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로 육성을 추진

### □ 기본 방향

-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화될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
  -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체질적인 개선과 환율 시장 안정 추구
- 외국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 세부 정책 과제

- 금융의 국제화 강화
  - 해외 대형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 (현재 서울시는 여의도의 서울시 소유 부지를 AIG 지역본부에 임대하고 AIG는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기로 양해에 거친 정도)
  - 해외기업의 국내 거래소 상장 유치 (2005년말 현재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자국 거래소에 상장한 해외 기업 수 : 싱가포르 122, 호주 71, 뉴질랜드 32, 일본 29, 홍콩 9, 대만 5, 말레이시아 4, 필리핀 2, 한국 0, 중국 0)
  - 외환, 장외파생상품(국가별 거래 비중, 2007년 4월) : 일본 3.5%, 싱가포르 2.7%, 홍콩 0.9%, 한국 0.3%)

○ **시급한 경제 자유도 개선**

- 헤리티지 재단의 2007년 경제자유도지수(IEF)에 따르면 홍콩은 1위, 싱가포르 2위, 호주 3위, 미국 4위, 뉴질랜드 5위, 일본 18위, 한국은 36위임
- 지난해 45위에서 개선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재정정책 자유도, 금융시장 자유도, 노동 시장 자유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뒤져 있음
- 한편 금융기관 규제 적합성(10점 만점)도 홍콩 8.19, 싱가포르 8.09 등에 비해 크게 낮은 5.74에 그침

○ **금융하부구조 구축**

- 법인세와 소득세 등 면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등 경쟁지역의 세율보다 불리
- 영어에 능통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겸비한 금융인력 양성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높으나, 금융허브에 필요한 국제적 금융인력은 경쟁국에 비해 수준이 크게 떨어짐)
- 의료, 교육, 교통, 환경 등 수준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생활여건 마련 (삶의 질 지수 : 미국(8.92), 싱가포르(8.03), 영국(7.76), 홍콩(5.91), 한국(5.64))
  - 교역과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 확립과 경쟁력 있는 인프라의 구축, 특히 외국 기업 진출 등에 대한 개방적인 마인드 확립

○ **국내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경쟁력 제고**

- 자본시장통합법등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동등한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다양한 상품능력 제고가 필요
- 자산운용중심의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가 시급한 바 DW(Data Warehouse: 조직 내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

○ **원화표시 금융상품, 한·중·일 공동통화제도 등 원화의 국제화 노력**

- 결제통화의 달러화 편중 현상을 시정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 규모에 걸맞는 원화표시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원화의 국제화 노력이 절실
- 韓·中·日 3국의 통화를 기초로 3국간 무역거래 시 결제 가능한 공동통화(Common Currency)를 창출하여 동북아 금융시장 내 환리스크 방지



### 3) 금융산업 양극화 해소

#### □ 필요성

○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회적 현상이 급변하면서 금융산업에도 다양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

- 개인자산보유(실물 vs 금융), 금융업규모(은행업 vs 비은행업), 금융서비스(서민 vs 부유층), 자금사정(대기업 vs 중소기업), 금융산업지배력(외국인 vs 내국인) 등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 국내 금융 산업은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체 금융소비자의 후생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

#### □ 기본 방향

○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은행 위주의 간접 금융시장에서 직접 금융시장으로의 균형 발전 도모

- 한편, 외국인 국내 금융기관 지분율의 빠른 증가에 대한 국내 자본 규제 완화 추진

○ 또한 사회 양극화에 따른 서민 금융 약화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이 필요

#### □ 세부 정책 과제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개인들의 금융자산 확보 시급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국내 가구의 자산에서 실물자산이 77~81%를 차지하는 등 금융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
- 이러한 수치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금융자산이 부족한 상태

○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

- 2006년말 일반은행의 자산규모 1,262.1조 원, 당기순이익 13.3조 원, 증권  
총자산 92.8조 원, 당기순이익 1.9조 원으로 은행업 위주의 금융산업 구조
- 은행산업이 비대하게 된 원인은 증권산업이 은행산업에 비해 경기에 민감한  
면도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은행 위주의 차별정책을 편 것도 큰 이유
- 투자은행을 육성하여 은행이 기피하는 기업금융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보험사들이 개인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은행, 증권, 보험 세 개의 축으로 균형 있게 육성

○ **차별적 미시적 서민금융 시스템 확충**

- PB금융, VIP 금융 등 부유층을 위한 금융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반  
대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서민들  
의 금융소의 현상이 심화
- 사회경제적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가 적용되면서도  
차별적인 미시적 서민금융 방안이 시급(전통적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대부업  
건전 육성, 대안금융 마련 등)

○ **투자은행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관계금융시스템 확립**

- 다수의 제조업 중소기업이 재무적 곤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채  
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노출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수많은 중소기업들  
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간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금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과 거래 금융기관 사이의 관계  
금융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는 새로운 금융방법으로 풀어야 할 것임

○ **금융산업의 내국자본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 절실**

-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가 활발해지고,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지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외국 자본의 국내 소매금융시장 잠식은 국부유출 뿐만 아니라, 금융주권 문  
제로 이어져 건설한 국가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외국자본에 대항하여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차별(출자총액제한제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제도 등)이 해소되어야 함

#### 4) 자본시장 육성

##### □ 필요성

- 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육성이 시급함
- 선진국 중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자본시장을 육성시켜야 할 것임
  - 선진 글로벌 은행들의 경우, 대출 영업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투자은행업 진출, 비이자수익증대, 해외진출 통한 시장 개척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금융시장에 비해 자본시장이 극히 취약한 상황임
-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2009년 2월부터 시행 예정)되어 투자은행이 탄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 취지는 증권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자보호를 통해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음

##### □ 기본 방향

-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탈피
  -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를 계기로 금융투자회사가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 조성
  - 은행 예금에서 자본시장의 금융상품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
-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 금융상품개발, PI(자기자본투자) 증대 등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은행 육성
  - 국내 증권사들은 외국계 투자은행에 비해 자기자본 규모가 상당히 미약한 상황임
  - 또한 투자은행 경험이 일천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전문인력 등을 영입함으로써 투자은행 업무 능력을 제고

□ 세부 정책 과제

○ 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허용

-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설계된 최신 상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 뿐만 아니라 은행 및 보험 관련 법안에서 포괄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자산운용시장 육성

- 현재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수탁구조가 단기이며 펀드규모가 영세한 것이 구조적이 문제점임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임
- 은행 및 증권회사의 자산운용회사 M&A 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금산분리법 재검토

- 금산분리법의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으로 유입시켜 금융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
- 금융과 산업자본이 협조하는 금산공조 원칙은 증권 등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 국내 자본시장은 현재 경제자유도나 국제화 등이 취약하고 금융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금융, 회계, 법률, 국제적 의사 소통 능력 등 글로벌 투자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및 기업이 체계적인 플랜을 수립·실행해야 할 것임
- 또한 우수한 해외 유학생 및 해외교포 등을 영입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해외시장 개척

- 선진 글로벌 투자은행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이머징 마켓으로 국내 글로벌 투자은행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 국내 대형은행의 해외 금융사 인수가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 법 개정이 필요

## 5) 금융 감독 강화

### □ 필요성

-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을 방지하고 신용에 따른 차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금융기관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리스크가 높은 분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은행권은 바젤 II<sup>7)</sup>에 의해, 보험권은 RBC에 의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전략 등이 추진되고 있음
  -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기업에 대한 대출 이율, 보험료 등이 차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 한편, 증권업계에 대해서는 2009년 2월에 실시될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한미 FTA에서도 국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감독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 기본 방향

- 감독 기준 강화 및 감독 시스템 개혁
  - 금융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는 금융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기반 경영
  -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에 대비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기반 관리의 추진이 요구

7) 바젤II란 선진 금융 기관들의 위험 관리 노하우를 토대로 마련된 전사적 위험 관리 체제를 바젤 협약이라는 준 규정화 제도 틀에 반영한 것임

□ 세부 정책 과제

○ 투명성 강화

- 우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할 것임
- 국책 금융기관의 개편을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함
-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규제 체계가 투명하고 간편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엄격한 규율 체계를 추구

○ 금융감독기구의 혁신

- 감독기관 편의 위주의 감독 행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된 것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의 상시감독체제가 일부 도입됐으나 여전히 정기검사 위주로 감독시스템이 운용돼 적시성 있는 감독이 필요한 상황임
- 금융감독위원장이 정치적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함

○ 투자자 보호 실시

- 금융투자회사의 위법행위와 잘못된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실패, 채무불이행, 파산 등으로부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면을 갖춰야 함
- 투자 권유에 앞서 반드시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재산 상태 등을 파악하도록 의무화한 자본시장통합법처럼 은행, 보험권도 투자자보호제도를 선진화해야 할 것임

○ 리스크 기반 경영

- 위험자본규제의 강화와 함께 리스크 관리는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므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경영진의 강력한 후원 하에 리스크 기반 경영 문화의 정착이 시급

○ 정보화 추진 필요

- 금융 감독에 관한 지식의 정보화 실시를 통해 급변하게 돌아가는 금융 환경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인터넷과 전자인증기술이 발달함에 따른 인터넷 뱅킹 등 전자 금융거래에 대비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3. 공공재정 : 공공 부문의 효율성 제고

#### □ 개요

○ (현상) 세계 경제의 글로벌 시대에는 정부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전제 조건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정부 경쟁력 강화 및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IMD의 정부 효율성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2007년 한국 정부의 경쟁력은 31위로 싱가포르(1위), 대만(20위)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에 밀리는 것은 물론, 중국(8위), 칠레(16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은 경제 발전 단계상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위치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 정부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은 과거 개발 연대의 공공 주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됨

○ (문제점)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무한경쟁 시대 하에서의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부문 자체의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기업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북돋우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국제경쟁은 표면적으로는 국제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으로 나타나나 그 근간은 국가시스템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정부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정부생산성은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 (해결 과제) 향후 정부의 역할은 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 큰 시장 작은 정부 추구, 불필요한 정부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통상 외교 능력 제고 등에 주력하여, 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창조성이 중시되는 21 세기형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임
- 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 : 재정 건전성의 제고를 위해 세 변수를 고려한 중장기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구조 조정을 수행해야 함
  - 큰 시장 작은 정부 추구 : 정부 부문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하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기업 및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장 실패의 경우 정부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할 것임
  - 불필요한 정부 규제 철폐 : 자본주의와 시장 경쟁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의 정책은 큰 시장 추구,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이상보다 현실 중심의 원칙 아래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할 것임
  - 공기업 민영화 추진 : 방만한 운영, 도덕적 해이로 대표되는 공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는 현재와 같은 요식적인 정부의 경영 평가가 아니라 민영화를 통해서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 통상 외교 능력 제고 : WTO 및 한-미, 한-EU FTA 등 다자 간 혹은 양자 간 협상의 확산 기조 하에서 우리의 통상외교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통상전문 인력의 양성, ODA사업의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짐



## 1) 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

### □ 필요성

○ (현황) 외환위기 이후 국채 발행과 공적 자금 투입 증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 들어 경제 발전 단계와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재정수지 악화 :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 보험료 수입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004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14.9조 원, 2007년에는 13.6조 원의 대량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현 정부 들어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3.4조 원으로 흑자폭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국가 채무의 단기 급증 : 이러한 재정수지 악화는 국가 채무 증대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2002년말 133.6조 원에서 2007년말에는 약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국가 채무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9.5%에서 33.8%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 재정수지 및 국가 채무 추이 >

(단위 : 조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22.7 (3.3)	7.6 (1.0)	5.2 (0.7)	5.1 (0.6)	0.9 (0.1)	13.4 (1.5)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	5.1 (0.7)	1.0 (0.1)	-4.0 (-0.5)	-6.5 (-0.8)	-14.9 (-1.8)	-13.6 (-1.5)
국가채무 (GDP대비, %)	133.6 (19.5)	165.7 (22.9)	203.1 (26.1)	248.0 (30.6)	282.8 (33.4)	301.1 (33.8)

자료 :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주 : 1) 2002~2006년은 결산 기준이며, 2007년은 예산 기준임

2) 2007년 명목 GDP는 본 연구원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4.5%와 최근 3년간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평균치인 0.7%를 고려하여 추정됨.

○ (문제점) 국가채무의 급증 추세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 받고 있으며, 미래 정부가 앞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장애가 되고, 조세 등 국민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 예상된다

-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태에 빠질 경우,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대되고 재정 정책의 운용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짐<sup>8)</sup>
- 최근과 같이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국민들의 조세 부담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특히 향후 국가 채무는 공적자금 관련 지급보증채의 국채 전환,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급증, 신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계획,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국방비 증액, 통일 비용 등 신규 재정 수요 확대에 계속 증가할 전망

## □ 기본 방향

○ 재정 건전성의 제고를 위해 세 변수를 고려한 중장기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구조 조정을 수행하여야 함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측면에서 소비적 지출의 성격이 강한 부문에 대한 지출을 통제하고 생산적 지출의 성격이 강한 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의 원칙을 삼아야 함
- 또한 불요불급한 정책사업의 축소, 중장기 국책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엄격한 정책평가시스템의 확립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

---

8)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나 재정수지 적자 정도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 국가들에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채 시장 만기 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은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한국 경제에 미국이나 EU 국가들의 경우와 같은 재정 정책의 운용 폭이 크게 제한 받는 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있음

□ 세부 정책 과제

○ 복지 부문 등 분배 편향적인 재정 지출보다는 경기 회복력 확충을 위해 SOC 투자 등과 같은 성장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가 절실함

-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기는 하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 복지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이하로 떨어진다면 복지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따라서 복지 정책 방향은 국가 주도의 '시혜적 복지'에서 기업 활동 활성화에 의한 '생산적 복지' 개념으로 전환

○ 중장기 국책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으로 제한된 국가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 특히 국가 균형 발전, 농어촌 지원, 복지·노동, 국방 분야에서의 재정 운용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정책평가 과정을 거쳐 정책집행 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가야 함

○ 지출 규모가 큰 교육, 사회간접자본, 농어촌 지원 등에서 예산증가를 적절히 통제하고, 사회복지 지출의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향후 복지관련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여타 부문의 예산증가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선진 국가<sup>9)</sup>에서 시행 중인 '지출상한제'를 도입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세수 확보와 민간 부담 억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세수 확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조세 행정을 포함한 모든 정부 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실패한다는 명제 아래,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대 국민 홍보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임
- 또한 무리한 세수 확충이 불가피할 경우 세율 인상보다는 과표 현실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경제주체들의 조세회피 유인을 최소화시키는 최적세율의 결정 등 조세체계의 점검을 통하여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9) 나라빚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미국, 스웨덴, 영국 등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렸던 선진국들은 90년대 이후 지출상한선 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지출을 통제하고 있음.

## 2)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추구

### □ 필요성

○ (현황) 참여정부는 일 잘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인식 아래 정부 기능을 확대하고 있어,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참여정부의 2003~2006년 기간 동안의 정부 재정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1.1%에 달하고 있음
  -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보면 복지 지출은 국민의 정부(1997~2002년) 동안 연평균 8.0% 증가한 반면, 참여정부(2002~2006년) 동안은 연평균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 총액은 2002년 135.5조 원에서 2005년에 163.4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조세부담률(조세/명목 GDP)도 19.8%에서 20.2%로 증가함
-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규모는 오히려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냄
  - 참여정부 4년 간 공무원 수가 88.5만 명에서 93.3만 명으로 4.8만 명 증가함에 따라 임기 중 증감률로는 6공화국 이후 최대를 기록함

### < 재정 지출 및 정부 규모 추이 >

(단위 : 조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재정지출 (증가율)	136.0 (-0.5)	164.3 (20.8)	173.5 (5.6)	187.9 (8.3)	205.9 (9.6)
조세총액 (조세부담률, %)	135.5 (19.8)	147.8 (20.4)	152.0 (19.5)	163.4 (20.2)	-

자료 : 한국은행.

□ 기본 방향

○ 정부 부문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하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기업 및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시장 실패의 경우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함
-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 등의 실효성 있는 실시를 통하여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함
  -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를 핵심으로 하는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sup>10)</sup>

□ 세부 정책 과제

○ 재정 지출 확대에 필요한 세원 확보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 경제성 없는 정부 사업 정리,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정부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늘어가는 정부 규모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을 하는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여야 함

○ 정부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 및 국민들의 신뢰 획득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정책평가 매뉴얼의 개발과 평가 결과를 일반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야 함

10) 구체적인 파행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신문,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1년 지났지만 파행 여전', 2007년 9월 10일자 참조.

- 그리고 정부정책 평가단의 효율적 정책평가를 위해 요청자료의 제출 의무화 등의 보완조치도 따라야 할 것으로 봄
-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용인원의 민간인 쿼터제도의 도입을 엄격하게 시행함과 아울러 5급 고시 선발인원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함
- 5급 고시 선발인원을 줄이고 대신 실제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의 특별채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능력위주의 인사관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자격 및 능력 검정을 위해서는 '인턴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사례 > 주요 국가들의 정부 부처 통폐합 정책**

- 일본 : 2001년 1월 중앙정부 조직을 1부(府) 22청(省廳)에서 1부 1청청으로 축소
  - 이와 더불어 10년 동안 25% 규모의 공무원 수 감축 계획
- 러시아 : 2004년 23개부에서 14개부로 축소
  - 공무원 수 30% 이상 감축(장관 30명에서 17명으로 축소)
- 영국 : 내각 부처 수를 1989년 이후 2001년까지 26개에서 17개로 축소
  - 공무원 수 1979년 73만 명에서 2001년까지 48만 명으로 34% 감소

### 3) 시장을 위한 규제

#### □ 필요성

○ (현황) '한국은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만들어 낼 정도로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이 수많은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 정부는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워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1999년 7,128건에서 2006년에 8,084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등록 현황)으로 증가함<sup>11)</sup>

#### < 정부 규제 건수 추이 >

(단위 : 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규제 건수 (누계)	7,724	7,837	7,846	8,017	8,048	5,055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 □ 기본 방향

○ 자본주의와 시장 경쟁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의 정책은 큰 시장 추구,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이상보다 현실 중심의 원칙 아래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할 것임

－ 정부규제 정책은 끊임없이 생성, 소멸하고 변화하는 동태적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과 권한 강화를 통하여 정부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11) 2007년 7월 현재 규제 건수는 5,055건으로 급감했으나, 이러한 급감 효과는 규제 건수에 대한 산정 방식 변경에 의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규제의 도입에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규제도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규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 세무 정책 과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타 부처의 예산과 인원은 줄이고 그만큼 규제개혁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의 대폭 확충을 통해,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확보해야할 것임
-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를 개별 규제 사안보다는 특정 이슈에 관련된 덩어리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 개혁의 성과를 제고시키고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임

○ 규제 일몰제, 부처 내 규제 총량제 등의 실시를 통하여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 1998년 규제일몰제 도입 이후 신설된 규제 2,549건 중 규제존속 기한이 명시된 경우는 2% 내외에 불과하는 등<sup>12)</sup> 규제일몰제가 사문화되고 있어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함
- 아울러 규제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폐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도 검토하여야 함

---

12)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일몰제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2007. 1.



- 규제개혁 전략과제별 연구용역의 외부발주를 통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 규제개혁 논의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여야 함
  - 연구용역 발주 시 덩어리 규제 중심으로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시에는 덩어리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상기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규제도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함

**< 사례 > 고이즈미 정부의 투자 관련 규제 완화 정책**

- ‘최저 자본금 규제 특례’ 실시 : 2003년 2월 ‘최저 자본금 규제 특례’에 의해서 자본금 1엔으로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자유로운 기업 설립이 가능하게 됨
  - 2006년 5월 회사법 실시로 인해 최저 자본금 규제가 완전 폐지
- 공업 등 제한법 폐지 : 산업구조의 변화로 수도권에 공장, 대학의 증설을 억제하는 것 자체의 유효성이 상실되어 2002년 7월에 폐지됨
- 공장재배치촉진법 폐지 : 기업의 공장입지 선정 추세가 보편화되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정을 재배치하는 정책의 유효성이 감소하여 2006년 폐지됨

#### 4)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 □ 필요성

○ (현황) 현 정부 들어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기업의 X-비효율성, 도덕적 해이, 방만한 경영 등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음

- 2006년말 현재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95조 8,243억 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94조 8,985억 원에 비해 51.8%가 급증
- 반면 공기업의 자산 규모는 2006년 현재 109조 8,703억 원으로 2002년의 79조 9,931억 원에 비해 37.3% 증가하는 데에 그침

##### □ 기본 방향

○ 방만한 운영, 도덕적 해이로 대표되는 공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는 현재와 같은 요식적인 정부의 경영 평가가 아니라 민영화를 통해서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 민영화 계획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 및 제반여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함께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민영화 일정 추진 시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 민영화에 따른 세부전략은 제도적 기반과 정치적, 사회적 여건 및 관련 산업의 경쟁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선택되어야 함

##### □ 세부 정책 과제

○ 공기업 내부에서도 민간 기업의 경쟁원리와 성과주의 등의 기업 문화가 보편화될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임

○ 공기업간 합병, 폐쇄를 통하여 공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아가야 함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업무조정 등 현재 난립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으로 재정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실질적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우리금융지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의 공기업 민영화의 과감한 추진을 통하여 정책금융기관들에 내재하고 있는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외국계 금융기관들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함
  - 정부가 수립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은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금융기관 간의 통폐합을 사실상 연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정책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따라서 민영화 일정의 단축을 통하여 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음
- 민영화 성공여부는 또한 관련산업의 경쟁상태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민영화 이후의 경쟁체제 확보를 위하여 공기업 상태에서의 규제와 함께 한시적으로 독점에 대한 정부규제의 제도화를 보완조치로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영국 대처정부의 민영화 경험에서도 민영화를 통하여 국가독점으로부터 사적독점으로 전환된 경우가 나타났으며 영국정부도 민영화 이후의 경쟁체제 확보에 많은 노력을 들인 바 있음
-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노조와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영화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인 정합성 확립과 정부의 일관적인 협상태도, 정책결정자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 등이 요구되어짐

**< 사례 > 고이즈미 정부의 ‘시장화 테스트’**

- 공공 부문의 민영화 : 2007년부터 1개 공공 사업 부문에 대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중 어느 쪽이 더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적합한지 경쟁 입찰로 결정하는 방법인 ‘시장화 테스트’를 시행
- 사회보험청(3개), 직업 소개 관련(3개), 고용·능력개발(2개), 등기 증명서 발급, 통계조사(2개)의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일본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국가 공무원의 6%에 해당하는 판 9,64명을 감원할 계획인데, 시장화 테스트를 통한 공공 업무의 민간 개방으로 민간 고용이 증가될 전망이다

## 5) 통상 외교 능력 제고

### □ 필요성

○ 양자 간 내지는 다자 간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세계경제 편입은 심화되어 왔으며, 이와 더불어 외국과의 통상분쟁 발생 건수도 증가추세에 있음

– 1995년 1월 WTO 출범 이래로 2006년까지 한국은 제소 13건, 피소 11건으로 총 24건의 분쟁에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며<sup>13)</sup>, WTO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분쟁빈도도 잦아지고 관련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음

– 또한 투자·경쟁·환경·노동·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이슈의 대두로 통상현 안들도 더욱 복잡다기화 되고 있음

○ 한-미, 한-EU FTA 체결로 한국의 대외통상 환경은 보다 더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이를 담당할 국내 전문인력의 확보는 미흡하여 통상의 교력 제고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FTA 협상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정부 내의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외교통상부나 재정경제부를 제외한 정부 부처는 통상전문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정부는 통상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OECD에 중앙부처 공무원 을 파견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까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sup>14)</sup>

---

13) 외교통상부, 「경제통상외교 활동성과」, 2006.

14) 경향신문, '언어소통 미흡 OECD공무원 파견 망신살', 2006년 2월 16일자.

< 참고 >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 (현황) 인도 등 신흥개도국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를 통하여 시장선점을 노리고 있는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정부는 ODA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음

- 2006년 한국의 ODA규모는 4억 4,700만 달러로 2005년의 4억 5,200만 달러에 비해 절반 정도 줄어들었음

- 이는 2006년 일본이 ODA사업에 지출한 11억 800만 달러에 비해 1/26수준에 불과함

- 실질 국민소득(GNI)대비 ODA규모에 있어서도 0.05%에 불과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포르투갈 (0.21%), 뉴질랜드 (0.27%)와 비교해 볼 때에도 초라한 규모임

○ (문제점) 우리나라의 ODA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한 것은 ODA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인식의 부족으로 ODA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결여되어 있는 데에 기인한 것임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규모에 걸 맞는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ODA규모의 확충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ODA 사업의 확대는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개도국들로부터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켜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음

- 외교통상부(무상원조 담당), 재정경제부(유상원조 담당), 한국국제협력단(ODA 집행기관) 간 체계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기본 방향

- WTO 및 한-미, 한-EU FTA 등 다자 간 혹은 양자 간 협상의 확산 기조 하에서 우리의 통상외교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통상전문 인력의 양성, ODA 사업의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짐
  - 경쟁촉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서로 간 보완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자유무역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경제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국내제도 및 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이점을 최대화하도록 하여야 함

□ 세부 정책 과제

- 무역 통상 부문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ODA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ODA 규모를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으며, 그 구성내용에 있어서도 2006년 현재 45%에 머물고 있는 무상원조의 비중을 국제수준에 맞게 90%까지 확대하도록 하여야 함
- 통상전문 인력의 육성을 통하여 주요국 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분쟁 사전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축적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나서야 함
  - 적극적인 제소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분야의 산업현황, 구조적 특징, 관련 법·제도 및 통상정책을 예의 주시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 또한 분쟁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별 상시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 통상교섭본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구축된 전문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함

#### ○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조항이나 분쟁당사국 외의 제 3자 개입이 허용되어 있는 국제분쟁조절 절차 등 현행 WTO 분쟁해결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제3자 참여나 공동제소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이해관계가 높은 분야에서 관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 경우에 따라, 상소절차까지 활용하여 한국의 입장을 부분적으로나마 관철시키고 제도개선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버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 무역상대국의 부당한 조치나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소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요구되어짐

#### ○ 주요 지역무역협정 회원국 간에 발생한 분쟁 건수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부분 양자 간 합의로 해결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미국 이외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이와 더불어, 대내적으로 국내제도 및 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새로운 통상이슈의 국제규범화 대비,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산업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향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 시 개방분야는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 오락·문화·스포츠, 운송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4. 복지 :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

##### □ 개요

- (현상) 낮은 출산율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경제는 노동인구, 국내총생산 감소, 국가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 증가, 복지수준 낙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65세 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18년으로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저출산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1인당 국내총생산 수준 변화,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재정부담 배분, 이에 따른 후생수준의 변화임
  -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동투입 증가율과 자본투입 증가율이 모두 둔화되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필요성) 노동력 감소, 국내총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여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 (해결 과제) 복지국가와 사회안전망 문제의 근원이 되는 저출산 고령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이민정책 등으로 직접적인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의한 노령인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사회서비스, 사회적 약자 보호, 양극화 해소 등의 국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인구고령화
  - 연금 제도 개혁
  -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사회적 약자 자립 기반 확충
  - 계층별 소득 양극화 완화



## 1) 저출산 인구 고령화 대응

### □ 필요성

#### ○ (현황) 저출산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소득보장 및 공적의료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고령화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연금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지출과 공적의료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고령인구 부양비가 크게 증가하여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 (필요성)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고령인구의 복지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기본적인 조건임

- 저출산 인구고령화 대책은 고령인구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임
-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 미래세대에게도 여유로운 삶의 조건을 제공함

### □ 기본 방향

#### ○ (재정개혁) 저출산 인구고령화가 재정지출 증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시해야 함

- 연금 및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기하고 세대간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
- 복지제도 규모가 계속 확대되므로 지출규모 확대보다는 복지전달체계의 정비를 통해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고령인구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고령인구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고용제도를 정비해야 함
- 고령인구에게 충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적의료체계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야 함

□ 세부 정책 과제

○ (출산장려정책과 이민정책 추진) 출산장려정책이나 이민정책 등 인구고령화를 늦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출산장려정책과 이민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저출산에 대응하여 생산가능인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과감한 출산유인정책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출산장려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함

○ (연금제도 개혁) 한편, 연금 및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임시방편의 제도 변경이 아니라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재계산 제도를 강화해야 함
- 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면 적립식 방식에서 부과식 방식으로 연금제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시장요소를 접목하기 위한 제도를 확대해야 함

－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등을 확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단순하고 기술적으로 표준화된 사회서비스 분야에 성과계약제를 적용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고령인력 고용 확대)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인력에게 적합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고 고령인력 고용을 촉진해야 함

－ 고령인력 고용안정센터와 고령인력 정보제공 기관을 확대하여 고령인력에게 고용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해야 함

○ (공적의료제도 개편) 공적의료체계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여 공적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함

－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등 전향적 지불제도의 확대·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보험약가제도 개선, 소액진료비 본인일부부담 확대 등을 통해 의료재정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2) 연금 개혁

### □ 필요성

- (현황) 개정 국민연금법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소득 대체율(연금액/일생평균 소득)을 현행 60%(40년 가입기준)에서 2008년 50%로, 그 이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0.5%p씩 줄여 40%까지 낮추기로 함
  - 대신 소득기준 하위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들의 범위를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9만 원 정도)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
- (필요성) 종전 2047년으로 전망되던 연금고갈 시기가 2060년 전후로 연기되는 등 재정안정화 효과를 다소 발생하였으나,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노력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 노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
  - 먼저, 현재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논의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둘째, 보험수리적인 연금의 재정안정화는 일부 달성하였지만 노후 빈곤예방이라는 국민연금 본래의 목적 달성은 실패
  - 셋째, 실재 소득액의 차이보다는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 파악률로 인해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부터 지역가입자로의 소득재분배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넷째, 기금규모 거대화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요

□ 기본 방향

○ 국민연금 제정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노후 사각지대의 범위 최소화, 기금운용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과제가 설정되어야 함

- 특히 개인연금제도의 부분 도입을 통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세부 정책과제

○ (부분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도입) 현행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대신 적립 속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을 검토

- 단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비(총급여/총보험료)를 1.0 이하로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확보

-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
  - \*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연금구조를 균등 부분 및 개인계정 부분으로 이원화하여 개인계정 부분은 확정기여형 완전 적립방식으로 운영
  - \* 균등 부분은 현행 확정급여형 하에 부과방식 비중이 큰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

○ (노후 소득 사각지대 축소)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내실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입조건 완화

- 저소득층 노인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의 완화하는 대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 (세대내 형평성 제고) 국세청의 세원 포착 노하우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4대 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
  - 조세개혁 인프라가 확장되는 속도에 맞추어 비과세 범위도 축소
  
- (기금운용구조 선진화) 연기금의 지배구조는 독립성, 효율성 및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 연기금 지배구조의 독립성 확보란 기금운용 성과와는 관계없이 정부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
  -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련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
  - 투명성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을 사전적으로 명문화하고, 기금운용 내역, 회의록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에 정기적인 공개
  
- (각종 연금의 통합 운영) 또한 중장기적으로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 연금에 대한 제도 개혁을 한 후,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
  - 한편, 근로생활을 영위하는 기간이 지금처럼 20년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은 허구적
    - 따라서 근로자의 정년 보장 혹은 연장 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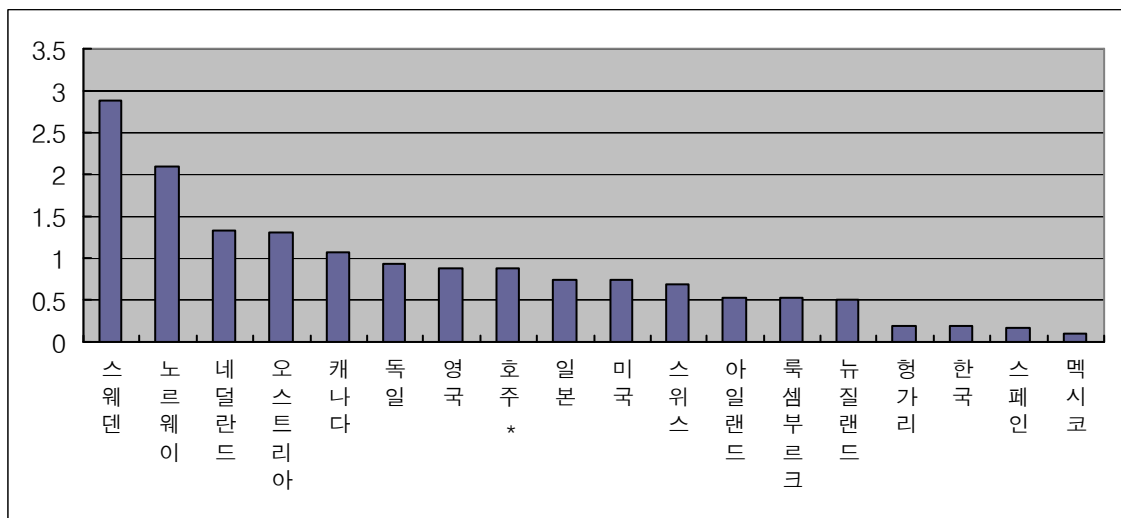
### 3) 한국의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 □ 필요성

○ (사회서비스 현황) 현재 한국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기반이 미비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은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수준 높은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 인력이 충분하게 육성되어 있지 않아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반면에, 급속한 인구고령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확대,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여가 생활에 대한 다양한 욕구 증가 등에 의해 사회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OECD 국가의 장기요양지출 GDP 대비 비율>



자료: OECD, 2004

주: 민간지출과 공공지출의 합계

- (필요성)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제공하여 동반성장의 토대를 형성함
  -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일정 규모 이상 제공하여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음
  - 사회서비스 공급은 보육과 교육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제고하고 고령인구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저출산 인구고령화 대책으로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제공함

#### □ 기본방향

-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 개편) 사회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함
  - 공급자 지원 중심의 현행 사회서비스 체계를 소비자 중심 체계로 개편하여 소비자의 필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함
  -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를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해야 함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사회서비스 수요자 개개인의 필요와 조건에 알맞도록 사회서비스 공급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의 낭비를 줄여야 함
  -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사회서비스나 낭비적인 시혜적 사회서비스를 과감히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약한 재원을 필요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함

#### □ 세부정책 과제

- (규제 개혁) 사회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해야 함
  - 산모·신생아 돌보미 사업에서 전문적인 훈련 수준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도우미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노인돌보미 사업의 경우 지원금액의 상한선과 함께 수요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사회서비스 수요기반을 크게 제한하게 됨

#### ○ (성과계약제 도입)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성과관리계약을 맺고 성과에 따라 서비스 대가와 보조금을 지불하는 성과계약제를 확대해야 함

- 성과계약제는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제도이므로 성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측정할 수 있는 단순한 분야나 기술적으로 표준화된 서비스 대상에 적용할 때 효과적임

#### ○ (서비스 이용권 제도 확대)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확대해야 함

-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분야에 적용하면 성과계약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임
- 서비스 이용권 제도는 소비자의 선택이 작용하여 공급자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공급기반이 형성된 분야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함

#### ○ (보육제도 개혁) 사립보육기관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폐지하고 기본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해야 함

- 사립보육기관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의해 사립보육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낮으므로 보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개혁해야 함
- 보육 기본보조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나 공급 기반 확대와 연관성이 낮으므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산모·신생아 돌보미, 노인돌보미, 취약자 돌보미 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부족하므로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양성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4) 사회적 약자의 자립기반 확충

##### □ 필요성

○ (현황)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가계수입(가구의 소득인정액<sup>15)</sup>)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계층에게 생계·의료·교육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며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해 빈곤탈출을 유도하고 있음

- 생계급여 대상자는 2006년 161만명에서 2007년에는 167만명으로 소폭 증가
- 현재 최저생계비는 매년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약 3.2%를 반영하여 갱신하여 3~3.5%의 최저생계비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7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 급여는 120만6천원으로 책정됨

○ (필요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이 안정된 기초생활을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기초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수급대상 및 장애인, 노인 등의 기초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 또한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등으로 사회진출 기반을 확대하여 이들이 근로 및 자산형성을 통하여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 기본방향

○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을 현실적으로 영위할 수 있고 상대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기초생활비 지원 및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노인 등 경제활동이 가능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수준의 일자리 제공

---

15)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

-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비 지원에서 현실적인 수준과 상대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생활비 지원이 필요함
- 취약계층 대상의 일자리제공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 세부정책

○ (기초생활 보장 확대)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물가 상승 등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의 재계측이 필요함
- 2007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 급여 산정은 4인 가구 1,206천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2006년 대비 3.07% 인상함
- 교통비, 난방비, 식료품비 등의 생활물가와 서민체감물가의 변동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초생계 급여의 재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생명 유지 수준의 기초생활보장이 아닌 상대적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기초생활 급여 >

(단위 : 천원)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6년도	418	701	940	1,170	1,353	1,542
2007년도	436	734	973	1,206	1,405	1,610

자료 : 보건복지부

○ (의료지원 확대) 생계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복지시설을 확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차상위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수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대상과 큰 차이가 없어 실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여 의료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수용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가정이나 일반요양시설에서는 보호하기가 어려운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노인 수용보호를 위한 전문요양시설 확충

○ (교육 지원을 통한 사회진출 기반 확대)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에게 사회 진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교육지원을 확대

- 기초생활 기반이 부족하여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과정 및 직업·재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확대하여 자기개발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부여함
-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관련 간접비용이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 자녀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생활안정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확대

○ (자립형 일자리 제공) 일반사업장 등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이용한 자립형 일자리 제공

- 시각 장애인의 안마센터를 장애인 단체가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공익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마련·제공하여 장애인의 취업과 사업기반을 조성
- 장애인 직업 재활 교육을 위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확대하고 재활 시설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판로를 확보, 상품의 판매시설 관리를 통한 자립형 일자리의 제공

## 5) 계층별 소득 양극화 완화

### □ 필요성

○ 외환위기 이후 경제 각 부문의 경제적 성과의 경제 기여도에 격차가 발생하여 취약부문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 여건을 악화시켜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곤층이 확대되는 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함

-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내수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공업과 경공업간 등 경제 각 부문의 경제적인 성과와 경제기여도의 격차가 발생함
- 취약 산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악화되어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곤층 비중이 증가함
- 예를 들어 전문직 경영관리직의 고소득층 종사자와 단순 노무자와 같은 취약 산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소득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은 가구소득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고 대물림되어 소득 계층의 고착화의 부작용임

### □ 기본방향

○ 경제 발전에 따라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산업간 격차가 심화되어 발생한 소득 양극화 문제는 경제 부문간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여 중산층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산업 체계를 발전시켜서 양극화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
- 경제 활력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육성을 위한 취약한 경제 부문의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함

□ 세부정책

-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력 수출품목인 조선, 철강, IT산업은 기술 경쟁력 확보에 의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섬유 등 경공업 제품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크루즈선, 특수철강 등과 같이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주력 품목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함
  - 디자인, 포장기술 등 상품의 차별화를 통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함
  - 이와 같은 기술과 고부가가치화는 단순노동자의 일자리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부문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경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대·중소 기업간, 도시·농촌간 갈등 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합의 문화를 정착하고, 부문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갈등 요소에 대한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여건과 기업간 협력 업체의 확대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성장 잠재력 확충)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거나 잠재성이 높은 신산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와 상업화 전략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함
  - 신성장 동력 산업의 발굴은 장기적인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 신산업에서 상품생산이 가능한 분야는 적극적인 상업화 전략을 통하여 국가의 기간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민간 부문의 활력 증진) 정부부문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 및 가계의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정부부문의 지나친 확대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각종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규모가 위축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부문의 시장진입은 지양하고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민영화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5. 남북관계 :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동북아 특수 창출

### □ 개요

- (현상) 북핵 진전 기대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의 FTA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어,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가 절대 긴요함
  - 이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의 ‘평화’와 경제 측면의 ‘번영’이 상호 상충 작용하면서 선순환적인 발전을 모색해나가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이 필수불가결한 과제임
  
- (해결 과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 속에서 ‘新 경협 정책’의 수립, 북한 경제 회생 및 개혁·개방 지원을 위한 통일 인프라(SOC) 구축과 남북경협 활성화의 재원 확충 및 동북아 경제권 주도를 위한 新 경협 사업 발굴에 주력해야 함
  -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 민족 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하에 과도기적으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을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며, 상호 신뢰와 열린 민족주의로 평화공존체제 구축에 주력
  - ‘新 경협 정책’의 수립 : 단기적인 성과와 개별 프로젝트 차원의 논의보다는 국토 종합 개발과 통일 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을 장기적인 경협 파트너로 육성하고 남북한을 연계 개발하는 상생의 남북 경협 모델을 개발해야 함
  - 통일 인프라 구축 : 인프라 구축은 단기적으로는 남북 경협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통일 후의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추진
  - 남북경협 활성화의 재원 확충 : 북한 경제 회생·개발, 나아가 남북 공동 번영과 상생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목표를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에 두고, 공적·민간 재원 조달 방법에 의해 남북경협 활성화의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함
  - 동북아 경제권 주도를 위한 新 경협 사업 확대·추진 : 지속 발전 가능한 남북경협 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권 주도를 위한 경협의 新분야를 개척하고, 나아가 이를 뒷받침 해 줄 新경제특구 등을 개발 지원

## 1)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 □ 필요성

○ 민족의 화합과 경제부국 달성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여 평화안정체제 구축이 동반되어야 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가시적 진전은 현실적으로 남북경협활성화의 재원 확충과 대북지원의 동북아 경제권 주도를 위한 신경협 사업 확대·추진이라는 상응조치를 수반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정치·안보 측면의 ‘평화’와 경제 측면의 ‘번영’을 병행 추진하여 상호 상승 작용을 하면서 선순환적 발전을 모색해나가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이 요망

### □ 기본 방향

○ 민족 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하에 과도기적으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을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며, 상호 신뢰와 열린 민족주의로 평화공존체제 구축에 주력

- 이를 위해서는 화해·협력을 제도화하고, 굳건한 안보 바탕 위에 상호 신뢰형성과 균축을 통한 평화적·협력적 공존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정치·군사·경제의 포괄적 상호 신뢰관계 형성, 남북 관계 제도화 및 정례화, 동북아 안보협력의 제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지원 다양화, 국민적 공감대 확대로 남남갈등 해소



□ 세부 정책 과제

- 정치·군사·경제의 포괄적 상호 신뢰관계 형성 (안보와 경제·사회 문화 부분의 병행 추진)
  -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의 병행 추진 : 확실한 전쟁 억제력(굳건한 자주 국방력과 한미 군사동맹 강화)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활성화와 ‘제도화’를 추구
    - 제도화란 남북 문제가 지속 발전 가능한(Sustainable Development)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
  - 상호 경제 발전을 통한 변화 유도 : 남북경협을 목표로 ‘통일경제적’ 관점에 입각하여 북한경제 회복 지원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두고, 성공적인 북한경제 개혁·개방 모델과 수출지향형 남북경협 모델을 개발·지원함
    - 이로써 북한경제의 탈사회주의화를 촉발하여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군축논의를 위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마련
- 남북 관계 제도화 및 정례화 :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교류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정례화·제도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임
  - 화해·협력의 제도화
    - 남북경협 활성화와 3통(통행·통신·통상) 보장을 통해 자유로운 물적·인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립·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화해·협력의 시대를 만들어나감
    - 특히,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가 시급
  - 남북 관계 정례화 : 기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제도화 진전을 위한 남북관계의 정례화 방안 모색
    -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 「남북총리급 회담」 · 「남북국회회담」의 정례화
    -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 재가동 및 6자회담 산하기구화 추진
- 동북아 안보협력의 제도화 :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회의 구성, 북핵합의 이행을 위한 주변국의 협력 강화
  - 국제공조 강화 : 남북한 당사자 해결 우선 원칙을 견지하되,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

- 남북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음
- 따라서 남북한 당사자 해결 우선 원칙(북측 표현 방식으로는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 우선 원칙)을 견지하되, 한반도의 평화안정체제 구축을 위해 주변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과의 양자관계 강화에도 노력해야 하며, 다자간 ‘경제·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함
- 특히, 21세기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할 인도, 유럽연합(EU) 등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주력해야 함

－ 안보협력체제 공고화

- 튼튼한 국방·안보 토대하에 탄력적인 대북정책 구사
- 21세기 한·미 「신안보동맹」 선언
-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지원 다양화<sup>16)</sup>

- －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NPT 복귀, 경제제재 완전 해제,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을 지원
- －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지원

○ 국민적 공감대 확대로 남남갈등 해소

- － 대북정책추진에 있어서 남남관계는 남북관계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대북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대북 지원의 합목적성에 대한 국민 설득이 필요함
- － 남북한 양 체제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전면적 교류·협력을 원활하기 위한 평화교육 실시
- － 남북관계발전과 경험을 통한 상생의 경제 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화합·창조 프로그램을 구상

16)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단계적 점진적 추진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첫 단계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둘째 단계에서 남북협력 심화 및 평화체제 토대 마련, 셋째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완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NSC,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2004.

<사례> 우크라이나 핵 포기 사례와 ‘넌-루가(Nunn-Lugar) 프로그램’

- 경제적 혜택과 안전 보장을 주는 대가로 핵 시설과 핵 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의 조치를 말함
- 구소련의 해체(1990년대 초) 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이 구(舊) 소련의 핵무기를 지닌 채 독립해 핵 강국으로 등장하자, 1991년 당시 샘 넌(민주), 리처드 루가(공화) 두 상원의원이 이들 핵무기의 폐기 방식으로 공동 발의함
- 원래 이름은 ‘위협감축협력(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으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3자 비핵화 조약” 체결(1994년)
- 미국은 넌-루가 프로그램에 따라 16억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마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에 있는 수천 기에 달하는 핵탄두와 미사일, 핵 잠수함과 핵폭탄을 제거했음
- 우크라이나는 이 조약 인준 후 모든 핵무기를 해체함으로써, 조약에 포함된 경제원조 보장을 중심으로 유럽사회에 편입되면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성공 사례임
- 이 모델은 현 2기 부시 행정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그 적용을 강력히 제시했기도 했음
- 시사점 : 우크라이나는 비핵화 이후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기여를 해 오고 있음

<사례> ‘헬싱키(Helsinki) 프로세스’<sup>17)</sup>

- 방안 : 헬싱키 프로세스는 조기경보, 분쟁예방, 위기관리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전쟁의 우발적 발생을 방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겪은 국가들에 대한 전후 복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섬
- 역할 : 안전 보장, 경제, 인권 문화의 포괄적 분야에 있어서 동서간의 접촉과 교류를 심화·확대하여 체제간 대립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왔으며, 사실상 동서 냉전 종결과 독일통일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여왔음
- 당시 냉전구조하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NATO와 바르샤바 동맹국들 간에 무역과 환경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인적·사회 문화적 교류 증진을 통한 긴장완화에도 크게 공헌함

17) 1975년 8월 1일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 동맹국 대표들이 처음으로 만나 3년여에 걸친 대화와 협의, 그리고 협상 끝에 ‘헬싱키 최종 협약(Helsinki Final Act)’을 채택하고,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출범시켰음. CSCE는 그 후 56개 국가가 참여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라는 국제기구로

## 2) '新 경협 정책'의 수립

### □ 필요성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증대와 남북 관계 개선 등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 기반 조성을 통한 지속 발전 가능한 남북 경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연내 핵 불능화 및 부시 임기 내의 북핵 문제 해결을 목표로 북미 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핵 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경협 활성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새로운 남북 경협 정책('新 경협 정책') 수립이 요구됨
- 더욱이 차기 정부에서는 남북 경협 및 국제 협력이 질적·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운영의 전문성과 신축성,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 기본 방향

○ 단기적인 성과와 개별 프로젝트 차원의 논의보다는 국토 종합 개발과 통일 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을 장기적인 경협 파트너로 육성하고 남북한을 연계 개발하는 상생(win-win)의 남북 경협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임

- 또한, 북한 경제 희생과 개혁·개방 지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 인프라 구축 등을 본거 논의할 협의체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 협력(컨소시엄 형성) 유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개편됐고, 유럽의 다자안보협력과 안보공동체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음.

□ 세부 정책 과제

○ 상생의 남북 경협 모델 개발 : 상호 발전을 통한 북한 변화 유도 가속화

- 남북한이 공동 참여하여 북한 경제 재건 전략 수립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의 기구 구성
- 우선은 3대 경협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기합의된 대규모 사업 중 성공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조기 착공을 시도

○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구성

- 지속 발전 가능한 남북 경협 체계 구축과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 중장기 경협 확대 방안에 대해 남북한 함께 모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경협위원회를 구성
- 우선은 남북한 경제 자료 교환, 공동 조사·연구를 실행할 남북 연구기관 간 공동 기구를 구성
- **남북 합동 경제 시찰단 파견** : 북한 경제 시찰단원 남한 방문 및 교육연수 확대는 물론, 남북 합동 시찰단을 구성하여 사회주의 경제권과 체제 전환국, 선진국의 우수 공단과 성공 사례를 함께 조사연구하거나, 국제기구 주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검토
- 우선은 남북경협추진위원회와 최근 발족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을 활용하되, 통일부와 재경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 공사, 관민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기구로 확대

○ 국토 종합 개발 차원의 경험 확대 방안 모색

- 통일 경제적 및 국토 종합 개발 차원에서 북한의 지역별·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남북한 연계 개발 전략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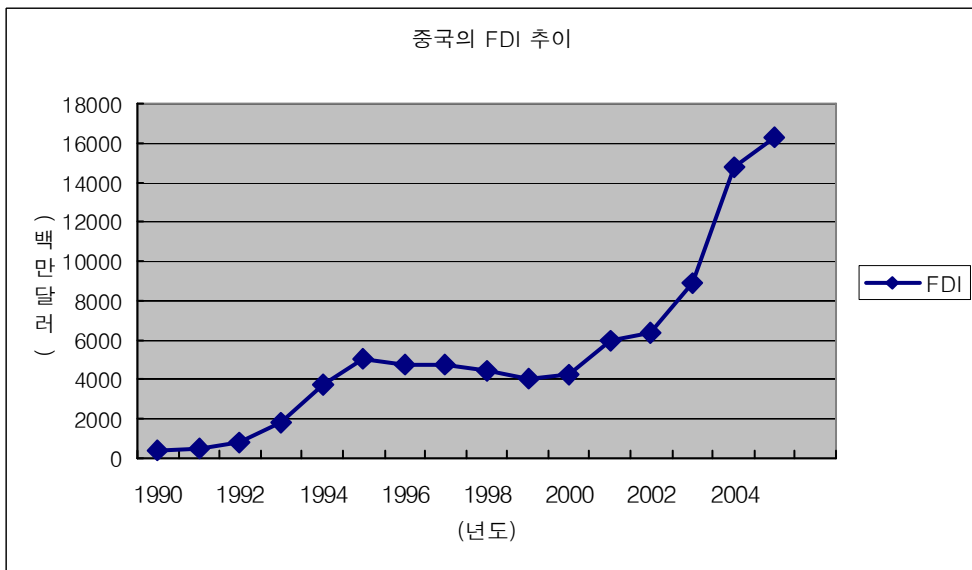
○ 국제 협력(컨소시엄 형성) 유도 : 세계 무역(WTO) 및 금융 체제에의 북한의 가입 지원

- 대규모 대북 사업은 자본 조달 측면은 물론, 투자의 안전성 확보와 위험 관리 등 사업의 지속성 차원에서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참여 유도가 절실
- 북한 정부의 경제 개방·개혁의 의지를 구체화·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무역 및 금융기구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입법을 정비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외자유치를 용이하게 하게 될 것임
  - 북한 경제시스템이 외부의 지원과 투자를 받아 효율적으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함
  - **국제 무역 체제 가입 지원** : 북한경제 회생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나, 심각한 경제난으로 자력갱생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국제지원을 위한 국제 무역 체제 가입 지원
  - **국제 금융 체제 가입 지원** : WTO,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을 통해 경제 개방·개혁 비용을 북한이 직접 조달하도록 유도

<사례> 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 가입과 북한에의 시사점

- 중국의 WTO 가입<sup>18)</sup> : WTO 가입 이후, 정책과 제도의 투명성 제고, 무역·투자 장벽완화, 대외 개방 확대 등으로 중국 경제의 국제화 및 개방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반면, 외국 기업의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 진출도 확대되어 경쟁이 가속화 되었으나, 중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 아울러,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승인 이후, 외국의 직접투자 (FDI)가 급속히 증가하여 중국경제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북한에의 시사점 : 중국의 WTO 가입은, 천안문 사태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무역 불균형 등의 정치·경제적인 여러 요인으로 지연, 이에 국제기구 가입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등 주요국과의 양자적 관계회복이 중요

- 중국의 WTO 가입이 1986년 GATT 가입신청서 제출 이후 15년 이상 소요된 만큼, 북한도 행정부의 일관된 개혁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WTO가 맹국과의 끊임없는 양자적 협상타결을 통해 가입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WTO 가입은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개혁을 의미하는 만큼, 북한 경제의 시장 메커니즘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하고, 국제수준의 정책 입안이 필수적임
- 나아가 향후 '남북한관 FTA' 추진이 용이하며, 국제적으로는 남북교역에 대하여 WTO협정 적용에 유리한 역할 기대

### 3) 통일 인프라 구축

#### □ 필요성

- 심각한 경제난과 자력갱생의 폐쇄적 경제 정책 추진으로 SOC 부문의 투자가 극히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수송망과 전력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임
  - 북한의 성장 잠재력과 공급 능력 확충, 성공적인 개혁·개방 등은 물론, 남북 경협 활성화와 통일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임

#### □ 기본 방향

- 인프라 구축은 단기적으로는 남북 경협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통일 후의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추진
  - 첫째, 남북경제공동체와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
  - 둘째,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수용 입장과 남한 기업의 정상적인 대북 투자 활동 지원 방향이 서로 부합되는 부문에서 우선 투자함
  - 셋째, 개혁과 개방을 향한 북측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과 대북 지원에 대한 남한 내부의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해 북측에게도 일정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며, 투자의 연속성과 위험 관리 차원에서 주변국의 참여 유도

#### □ 세부 정책 과제

##### ○ 인적 인프라 구축

- 북한 내 경제·산업 인력 및 기술 교육 센터 설치 및 젊은 인재의 한국 등 선진국 유학과 해외 연수 지원
  - 대외 무역과 경협, 농업과 과학기술, 국제 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교육 지원
  - 북한 산업 연수생 도입을 통해 남북 경협 활성화 및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

18) 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WTO가입이 필수적이라 판단하여, 1995년 WTO출범이후 WTO 가입노력을 계속하였고,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고, 비준절차를 거쳐 12월 11일 정식 발효됨.



○ 제도적 인프라 구축 : 남북 교류 협력 확대에 따른 법제 통합 필요성 증대

- 남북한 경제협력관 설치 (서울-평양, 양측 인력 상주)
- 남북한 산업 표준 통합 기반 구축 : 남북간 산업 및 기술 용어의 표준화
  - 남북간 용어 표준화 비용이 미국 RAND 연구소는 약 50~670조 원, 골드만 삭스는 92~19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독일은 통일 후 2004년까지 약 180조 원을 투자(통일비용의 10%)한 것으로 알려짐<sup>19)</sup>
- 남북 경제 특구법제 실무 협의회 구성 : 경협 법·제도의 국제화
  -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특구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협의 → 심천 경제 특구 사례 분석
  - 국제법적 대응 방안 강화 : 전략물자 반출, 원산지 규정과 판로 문제, 민족 내부 거래로의 인정 등 남북 경협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
  - 남북 경제 통합에 대비한 법제 정비
- 4대 경협합의서 및 기타 남북 경협 관련 합의서들의 실질적 발효 추진
  - 주권국가간에 체결된 일반적 조약과 달리, 남북한 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조약’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국내법적으로도 효력을 갖도록 추진
  - 주요한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청산결제 제도 도입

○ 물리적 인프라 구축 : 육·해·공의 정기 노선화와 종합물류시스템 구축

- 연결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운행 정상화와 연결 구간 연장 : 이는 물류비 절감과 인적·물적 수송의 편의성 제고 등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서울~신의주간 경의고속도로 건설 지원
  - 김포~순안간 남북 정기 항공로 개설
  - 남포항 및 원산항의 현대화 지원
- 철도·도로 등의 육운과 해운·항만 등의 종합 물류 시스템 구축
  - 남북한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나아가야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통·물류체계 통합이 절실한 문제임

19) 이희범, “남북 교역 활성화 방안”,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 강연 내용, 2007. 7. 10

- 동북아 경제권내 해상·항공·철도 운송 및 복합 운송 시스템의 물류망 연계를 목적으로 하며, 남북한 철도 연결 및 동북아 교통 연계망 구축이 주요 요건임
  - 특히,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진출전진기지(Gateway to Asia)로 삼을 수 있도록 거점시설<sup>20)</sup>과 물류네트워크 확충 촉진
  - 이는 북한 지역개발(경제특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물류개선으로 산업기능의 확대 및 지역경제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며, 물류의 합리화를 초래하여 북한 상거래의 대형화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 금강산 및 개성 지구의 통신망 확충과 협력 확대
- 자유로운 3통 추진 (통행, 통관, 통신)과 절차 간소화
  - RFID(무선자동인식시스템) 설비와 인터넷을 통한 통관 간소화와 물류비 절감

**<사례> EU의 교육 프로그램과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시사점**

- EU의 사례 : EU는 ‘Tempus’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 동유럽국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 지중해 남부지역 국가 등 후진국을 지원하는 공동체적 원조를 실시함
  - 특히, 제 3세계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즉 자연재해, 가난극복, 사회계층과 성차별, 인권침해, 정치적 갈등 등을 학문적 차원에서 지원
  - 또한 이들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개혁을 위한 보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경제에 대한 적응을 위한 고등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위하여 공동체적 원조 계획임<sup>21)</sup>
- 북한에의 시사점 :
  -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경제학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을 남한과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특히 북한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장경제와 국제 상거래에 대한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권유·지원함으로써 남북 경험 활성화와 개혁·개방 확대 유도

20) 국제물류센터 추진후보지로는 현재 남북경제협력사업 중심지인 개성, 남포, 고성군(금강산), 신포(경수로), 접경지역물류센터, 백두산(관광), 등을 들 수 있음

21) 이 계획의 예산은 매해 책정이 되며, 2000년의 경우에만 185만 유로(254만 달러)였음. 육성수, 『유럽공동체의 교육정책 역사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와 유럽주의의 문제』 (석사논문), 한국외국어대, 2005년, p. 58

#### 4) 남북경협 활성화의 재원 확충: 남북협력기금 재원 확충과 외자 유치 확대

##### □ 필요성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원 확충이 불가결 한 문제로서, 남북협력기금 재원 확충과 외자 유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

##### □ 기본 방향

- 북한 경제 회생·개발, 나아가 남북 공동 번영과 상생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목표를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에 두고, 공적·민간 재원 조달 방법에 의해 남북경협 활성화의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함

-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민간 재원 활용, 국제무역·금융체제의 재원 활용, 통일기금 마련, 국제 지원을 통한 '북한판 마셜플랜' 실시, 남북협력기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의 재원 확충

##### □ 세부 정책 과제

##### ○ 민간 재원 활용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의 창설,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제정 및 제도적 정비 등의 인프라 개선과 관료주의적 장벽 제거 필요<sup>22)</sup>

22) 뉴스위크는 '세계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시장'이란 기사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 리스크가 큰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투자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변핵시설 폐쇄 등으로 북핵협상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담한 외국 기업들은 북한 시장의 선점 효과를 노리고 대북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 『뉴스위크』, 8월 12일호.

- 민간의 대북투자는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투자위험도 최소화 조치, 투자형태의 다양화, 금융 및 경제제도의 체제개혁 및 효율화, 남북 협력모색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원 조달

### ○ 국제무역·금융체제의 재원 활용

- ODA 기금, WTO DDA Global Trust Fund의 대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의 주요 재원 활용<sup>23)</sup>
- 단기적으로 북한에게 현금 부담 요구가 어려운 만큼, SOC 완공후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이나 북한내 광물 및 관광자원의 개발·운영권을 요구

### ○ 통일기금 마련

- 통일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시중 부동산자금의 생산자금화 혹은 통일기금화 차원에서 무기명 통일채권이나 남북경협지원채권 발행
- 일정 규모에 한해 자금 출처 면제의 중장기 저리 국공채 발행
- 통일 펀드 조성과 국내 금융 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
- 민자 유치를 통한 남북경협지원기금 신설

### ○ 국제 지원을 통한 '북한판 마셜플랜' 실시<sup>24)</sup>

- '북한판 마셜플랜'은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대규모 경제지원 대책으로,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와 식량 지원을 대폭 늘리고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등 경제지원을 통해 체제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
-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 경제협력과 체제보장을 한다는 구상으로 경제지원을 통해 체제전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인

---

23) WTO DDA Global Trust Fund는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 따라 설립된 기금으로 2002년부터 WTO의 대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24) 2003년 초 정 동영 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 자격으로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한국이 북한판 마셜 플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특히 통일과정 및 통일후의 대북 개발지원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차원의 국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의 '대북개발지원 프로그램'의 구상 및 홍보

○ 남북협력기금의 탄력적 운용

- 경험 확대에 따르는 남북협력기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마련한 통일기금 중, 남북협력기금의 탄력적 운용이 관건으로 '남북협력기금관리운영회' 구성
- 특히, 경험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자금이나 수출금융의 전용, 또는 산업구조 조정 차원에서의 탄력적 자금운용이 요구되며,
-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이 요구되며, 선투자한 기업과 투자 부문에 대한 재평가도 병행되어야 함

<사례> (유럽)마셜플랜 vs. 북한판 마셜플랜

- (유럽)마셜플랜(1948~51년)
  -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이 유럽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미국은 유럽 경제를 되살려 소련의 공산화를 저지한다는 반소 반공주의 유럽경제부흥정책(ERP)'을 채택함
- 문제점 : 동독판 마셜 플랜의 사례
  - 동서독 통일(1990. 10) 후 독일 정부는 동독 지역에 대해 무려 600억 달러를 퍼부었지만 동독지역의 경제는 계속 파산상태에 머물러 있어 독일 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북한판 마셜플랜 시사점
  - 자금 사용의 투명화, 경제 부흥과 연계 프로그램 제시와 관리

## 5) 동북아 경제권 주도를 위한 新 경협 사업 확대·추진

### □ 필요성

- 동북아 경제권 주도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은 대부분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나 단순 위탁가공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경협증대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新 경협 사업 발굴이 요구됨

### □ 기본 방향

- 기존 개성공단 및 남북관광 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新경제특구 개발로 개방 지역을 확대해 나가며, 기술지원을 통한 북한 산업 정상화 지원 및 개발 유도, 농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배양과 IT 사업 등의 新분야를 개척하고, 나아가 북한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 세부 정책 과제

#### ○ 개성공단 및 남북관광 사업의 활성화

- 3대 경협 사업(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한편, 기합의된 대규모 사업 가운데 성공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조기 착공 시도

- 남북경협의 시발이자 중심이 될 개성공단의 활성화<sup>25)</sup>

·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해 개성공단의 지속·발전과 나아가 제 2의 개성공단(경제특구)과 연계 개발하며, 각 중점 산업분야에서 남북간 연계를 통한 분업화 전략 모색

---

25) 개성공단은 인천항과도 연결됨으로써 서울(금융·회계)~인천(물류)~개성의 삼각 경제벨트(triangle economic belt)는 물론, 동북아의 물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금강산-설악산 연계 「관광특구」 조성

- 해금강에서 원산까지 19억8,300만㎡ 6억평 규모의 금강산 개발과 설악산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관광사업을 확대

○ 新경제특구 개발로 개방 지역 확대

－ 「新경제특구」 조성 : 동해안의 청진, 서해안의 남포 등에 개성공단型 경제 특구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활동 무대를 확장하여야 함

-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여 남북 협력 제품의 한국산 인정 추진 (개성공단 우선 추진)<sup>26)</sup>
- 또한 속초, 거진항 등을 「대북특구 연계지역」 으로 개방하여 경험을 통한 남북 균형 발전 실현

－ 「남북한판」 FTA 추진 :

- 북한산 상품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수출금지적 성격의 Column II 관세를 적용받고 있을 뿐 아니라, 최혜국(MFN) 대우와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받지 못해 서방국으로의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
  - 북한내 남한 전용공단과 공동 진출기업에 대해 세계·금융상의 지원이나 이들 기업 상품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허용
  - 경제특구의 수익성과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동포우대법 도입에 위한 북측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나, 남북한판 FTA를 추진하여 수출확대 방안 모색<sup>27)</sup>
- 수익성과 판로 확보는 물론, 규모의 경제 효과도 누릴 수 있으며, 대외 무역 협상력 제고에도 큰 보탬이 됨

○ 기술지원을 통한 북한 산업 정상화 지원 및 개발 유도

- － 남북한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나아가야 하기위해서는 북한의 산업 정상화 지원 및 개발 유도가 절실한 문제임

26) 현재 개성공단 제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싱가포르, 아세안 등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한미 FTA 협상에서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산 인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함.

27)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는 한반도비핵화, 남북관계, 노동·환경기준 등 세 가지를 OPZ 지정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본격적인 경협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앞서 북한 산업의 정상화로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켜야만 남북간의 상호보완적인 경제 교류·협력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한국의 발달된 제조업 기술 등의 대북 기술원조 및 선진기술 흡수 등 역량 확보 지원을 통해 북한의 산업 개발을 유도

### ○ 농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배양과 IT 사업 등의 신분야 개척

- **농수산업의 자급자족기반 구축** : 식량·농자재 지원, 농업생산기반 구축, 협력생산 등을 통해 농업개혁을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을 배양해야 함
  - 북·중·러 접경지역에 농장, 산림 개발단지 조성
  - 북한 농수산물 가공단지 건설 및 남한내 북한 특산물 판매시장과 연계 개발 등의 남북 농업협력체제 구축
- **IT 사업의 활성화 및 他 산업과의 연계 유도**<sup>28)</sup>
  - 남북 IT협력<sup>29)</sup>은 경제적 관점에서 어느 일방이 아닌 서로에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기반 구축에서 IT부문의 역할이 기대됨
  - 국제 IT 회의 및 국제상품전람회 등에 남북 공동 진출 방안 모색

### ○ 북한 자원 개발 사업

-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해 남측 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의 구체화 및 에너지 개발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상대적으로 북측에 풍부한 각종 광물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남측의 산업에 이용함으로써 남북 경협의 효과 극대화 추구

28)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IT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번 도약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나 북한 주민의 다수가 컴퓨터 교육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임. 이러한 남북한 절대적 정보격차는 향후 통일한국이 부담해야 할 엄청난 통일비용과 통일한국이 북한 지역의 정보통신 발전과 주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과하기 어려운 사안임. 그 뿐만 아니라 남북한 정보격차는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나 북한 사회의 변화를 도출할 다양한 경로를 막는 장벽으로 판단됨

29) IT분야에서는 남북 협력은 현재 총 14건의 경제협력사업이 승인돼 1805만 달러 규모의 대북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특히 14건의 협력사업 중 9건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사업이라는 점은 경제성이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음



－ 북한내 조립사업과 연계하여 탄소 배출권 사업 추진

- 북측 지역의 산림녹화 사업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등의 수해 예방은 물론, 자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배출권 거래 관련 남북공동법인을 설립하여, 남측 당국이나 기업으로부터의 탄소배출권 구입비용으로 북측에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
- 또한, 북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이용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형 발전소 건설, 풍력 에너지 이용 등의 에너지 개발 공동 프로젝트 추진

<사례> 중국 심천 특구의 성공과 북한 경제특구 시사점

- － **심천특구의 사례** : 심천경제특구는 수권입법을 통해 개혁적이고 탄력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경제특구의 입법 시행이 성공한 경우 전국의 입법으로 승화시켜 국가 전체의 개혁·개방을 이룩하였음
- － **북한 경제특구에의 시사점** :
  -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 의지를 가지고 新경제특구에서 새로운 개혁입법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중국의 수권입법과 같은 정보의 입법권한을 개성공업지구에 부여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는 특구지역의 물류효율화와 야간활용을 위한 무역절차의 간소화,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되는 절차 등의 원활화를 중점적으로 지원

<사례> 독일의 통일과정과 동서독의 경제 격차 해소

- － **독일의 통합 비용 조달 사례** : 동서독의 예를 보면 한반도 통일 이후에 통합 비용을 줄이는 것은 통일 이전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데 있음을 알 수 있음
- － **시사점<sup>30)</sup>**: 남북한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순차적인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임
  - 구체적으로는 농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배양과 IT 사업 등의 신분야를 개척하여 북한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지원

## 6. 기업 : 시장 경쟁 체제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화

### □ 개요

- (필요성) 세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글로벌 시장의 단일화를 가속화시킴에 따라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육성이 시급함
  - 2007년, 미국의 경영전문지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중국은 24개 기업이 포함된 반면, 한국은 14개 기업만이 선정되었고,
  - IMD는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조사대상국 60개국 중 중위권(평균 30위)으로 평가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주문자 생산방식·아웃소싱 중심의 사업모델 치중과 외환위기 이전, 정부 규제와 보호 장벽아래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전문성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임
  
- (기본 방향) 정부의 기업규제 정책에 대한 변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100대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야함
  - 국제표준기구 등 세계 경제기구들은 주주가치 경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축하고 있음

---

30) 박광작, “구 동서독의 경제 협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월간 통일경제』 12월호, 1996년.; 김창권, “독일 통일 비용 15년 평가와 시사점”, 『통일경제』 겨울호, 2005년.

- 글로벌 스탠더드란 단일화된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규범으로 경제 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공통적인 필요조건을 의미함
- 국내기업들을 글로벌 기업<sup>31)</sup>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인프라, 핵심역량,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는 기업 규제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 (해결 과제) 인프라의 경우 금융투자와 사업의 기반 조성에 대해, 핵심역량에서는 글로벌 역량 강화와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함
- **주주 가치 경영** : 투명성 확보를 통한 주주가치 경영의 극대화 여건을 구축
- **신수종 사업 개발** : 신수종 사업 발굴을 방해하는 제도적 결함을 해소
- **글로벌 역량 강화** : 국가간 경쟁에서의 기업과 정부 간의 협업방안을 모색
-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 간 중재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부, 기업, 노조의 역할을 재정립
-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성장 지향** : 기업 윤리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31) 아루누 드 아이어는 ‘글로벌 기업의 조건(교보문고, 2007.1)’이라는 저서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와 M&A 등 시장 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단계를 거쳐 인재, 시스템, 브랜드 등 사업수행의 역량을 강화한 후 사회 및 환경과 조화롭게 성장하는 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

## 1) 주주가치 경영을 위한 금융 투자환경 조성

### □ 필요성

○ 글로벌 기업으로서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의 자유화에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의 투명성이 보장된 주주가치 경영이 요구되나 한국은 취약함

- OECD는 1999년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초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구축함
- 반면에 IMD는 한국기업의 외계감사 분야를 조사대상 60개국 중 37위로, 주주가치 경향에 대해서는 39위로 낮게 평가함

### □ 기본 방향

○ 기업의 내·외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

- 내부 통제시스템의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의 선진화와 국제회계기준 도입, 지배구조 개선상의 순환출자구조의 규제 완화 등이 요구되며,
- 외부 통제시스템의 경우 소액주주권의 강화와 기업공시제도의 보완이 요구됨

### □ 세부 정책 과제

○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의 자격 및 선출 강화와 연임제 등 실행절차 상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됨

- 엔론 사태 이후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는 사외이사 자격을 퇴직 후 5년경과, 사외이사로만 위원회 구성 등 신규 안을 제정해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함
- 실례로 GE는 16명의 이사진 중 1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연간 3회 이상 사외이사들만으로 이사회 개최와 산하 위원회 운영 등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 반면에, 한국은 경영진과 밀착관계에 있는 지인들로 사외이사 선출이 가능하며, 서면회의, 연임제 등이 가능해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소리가 높음
  - 현행 미국의 경우처럼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강화와 사외이사의 단임제 도입 등 실행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해야할 것임

○ 새롭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상법개정 등 기업 확산을 위한 대응책을 구축

- 국제거래 폭증과 다국적기업 증가로 인해 생성된 국제회계기준을 미국이 2008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각되고 있음
- 국제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기 때문에 등 한국의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회계기준과는 큰 차이가 있음
  - 실례로 2006년도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연결 기준(9조 100억 원)과 개별기준(6조 9300억 원)간에는 2조 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함(한겨레, 2007.7)
- 정부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실무지침 등 기업 확산을 위해 외감법과 증권거래법, 상법 등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대응책을 강구

< 국내외 회계 기준의 주요 차이 >

구분	국내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	미국회계 기준
특징	- 규칙 중심	- 원칙 중심	- 규칙 중심
주 재무제표	- 개별 재무제표	-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제표
연결범위	- 지분 30% 초과 및 최대 주주인 기업 - 실질지배력을 가진 기업 (단 예외 있음)	- 지분 50%초과 보유기업 - 실질 지배력을 가진 기업	- 지분 50%초과 보유기업 - 실질 지배력을 가진 기업
자산부채 평가법	- 신뢰성 중시 -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취득원가로 평가	-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	- 신뢰성 중시 -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취득원가로 평가
연구개발비	- 요건충족 시 자산인식	- 요건 충족 시 자산인식	- 원칙적으로 비용인식
상환 우선주 분류	- 자본	- 부채	- 부채

○ 정부의 순환출자구조의 반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의 순환출자구조는 재벌의 소수지분을 통한 경영권 지배로 부각되고 있지만,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규모의 경제 추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실례로 일본의 도요타와 독일의 도이치 뱅크, 인도의 티타 그룹 등은 계열사와 순환출자 구조로 연결된 글로벌 기업으로서 평가받는데 큰 문제가 없음
- 지주회사체제와 순환출자구조와 같은 지배구조에 관한 선택은 기업 자체의 경영전략의 부합여부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지, 정부가 요구하는 문제가 아님
  -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에 자회사 주식평가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가 넘으면 지주회사로 분류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 현행제도를 완화해야 함

○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집단 소송제의 범위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대주주 지분은 감소하는 반면,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보호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증권집단소송제는 시세조작 등 증권분야에만 한정되어 있고,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분식회계 분야의 집단소송제도도 기업담합 등 불공정거래나 합병, 영업양도에 의한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에는 미흡한 상황
  -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단소송제 적용과 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실제 잘못 이상으로 배상하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고려

○ 투자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제거를 위한 기업공시 제도의 보완이 필요

-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2006. 4. 1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총 200개에 달하던 공시의무사항 중 129개가 삭제됨
  - 문제는 삭제된 공시의무사항 중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해외채권발행 등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임
  - 또한 투자결정·경제성 판명, 특허 양수·도, 기술도입·이전, 계약체결·해지 등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은 자율공시로 전환됨
  - 반면에 뺏튀기 실적, 연결 및 개별 기준 등에 따른 실적 공시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별다른 재제가 존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2) 신수종 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여건 조성

### □ 필요성

#### ○ 원가우위의 중국과 품질우위의 일본 사이에 끼인 한국이 제도약하기 위해선 신수종 사업의 발굴이 요구되나 제도적 결함으로 투자가 미흡한 상황임

- 중국은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와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등장하면서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은 엔저효과로 인해 한국 제품 대비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한국의 해외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 반면에 한국은 참여정권 이후 기존 주력산업인 전자, 자동차, 조선, 제조, 기술 이외에 新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평균 4.2%대의 저성장 기조에 머물음
- 그 이유 중 하나는 2006년 말 53조 3,300억 원(증권선물거래소)에 이르는 현금성 자산을 국내 상장 기업들이 투자환경의 제도적 문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 기본 방향

#### ○ 기업 투자활동의 발목을 잡는 제도의 과감한 폐지와 완화를 통해 신수종 사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구축해야 함

- 신수종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사전에 봉쇄하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대책 구축과 출자총액제도의 폐지, 국내기업의 해외 기업 M&A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법의 과감한 폐지와 완화가 요구됨
-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설립 등 신수종 사업을 육성하기위한 실행과정에서의 행정규제의 완화와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 세부 정책 과제

○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 정책이 시급함

- 포스코에 대한 아르셀로-미탈의 적대적 M&A 활동처럼 중국과 인도기업들은 2005년에만 91건<sup>32)</sup>의 글로벌 M&A를 성공시켜 세계경제의 다크호스로 떠오름
- 이와 관련해 미국은 엑슨-플로리오법, 영국은 산업법, 프랑스는 화폐재정법,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심사법, 호주는 외국인 인수·합병법, 일본은 외국인 투자법에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음
- 이러한 법안들은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지만 한국은 경제 분야 정부부처간의 이견으로 부재한 상황임
- 특히,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조선, 반도체, 철강,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경향이 높아 적대적 M&A의 방어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신수종 사업을 발굴·육성하기위한 장기적인 투자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주요 선진국의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M&A 방어 대책 >

국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M&A 방어 대책
미국	- 엑슨-플로리오법을 통해 대통령 산하 대미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M&A에 대한 조사권과 금지권을 부여
영국	- 산업법에 의거 국익에 반하는 중요한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인수를 규제(정부의 황금주 보유방식)
프랑스	- 화폐재정법은 공공질서, 보건,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사전승인을 요구
캐나다	- 외국인 투자심사 법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의 직간접 인수는 사전심사
핀란드	-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 2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외국인이 지분의 1/3 이상을 취득하거나 기타 국익을 저해하는 경우, 사전신고 및 무역산업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호주	- 외국인 인수·합병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의 경우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제
일본	-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국가안보, 공공질서, 보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안별로 사전적 심사규제 실시
중국	- 외상투자방향에 대한 잠행규정에서 외국 자본이 진입 가능한 산업 영역을 장려, 허가, 제한, 금지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심사

32)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06년 세계투자보고서'(2006.10.16)



○ 사업투자 기회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도의 조속한 폐지가 필요함

- GE는 환경과 정보통신을, 프랑스의 베올리나 워터사는 해수사업을 신수종 사업으로 설정하고 투자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신수종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 반면에, 한국기업들은 환경, 생명공학, 문화, 정보통신 등 향후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신수종 사업을 모색 중이나,
  - 한국기업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하에 도입된 정부의 출자총액제도에 묶여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 대책으로 현금을 기업 내 쌓아두는 상황임

○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법의 완화가 고려되어야함

- 금융사의 경우, 글로벌화가 주요이슈로 등장하면서 각 증권사들은 해외기업의 M&A 등 자기자본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유상증자에 집중하고 있음
- 해외선진 투자은행들의 자본규모가 거의 20조 원에 이르는 반면 한국 증권사들 중 1조 원을 상회하는 기업들은 우리, 삼성 등 6개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임
  - 특히, 한국의 증권사 상당수가 대기업 계열사라고 볼 때, 산업자본의 금융 산업 유입금지에 따른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통해 대형화가 필요함

○ 국내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장 설립 등 입지규제의 완화 및 철폐가 필요함

- 수도권 지역에 공장설립이나 민간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입지선정에서 공장설립인허가 단계까지 많게는 39개의 행정규제가 존재해 투자조건이 어려운 상황임

- 대표적인 사례가 하이닉스의 구리공정 전환 문제로 공장설립에 대한 입지규제와 이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조율지연으로 공정전환에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됨

< 공장설립 유형별 관련규제 >

구분	개별입지(공장설립 승인)		계획입지(민간산업단지 개발)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입지선정 단계	19개	21개	18개	19개
공장설립 인허가 단계	16개	18개	14개	17개
합계	35개	39개	32개	36개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국한된 규제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OECD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2004년 92억 달러에서 2005년 63억 달러, 2006년에는 36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상하이의 1990년부터 5년간 끌어들이 외자가 2,646건인데 반해 인천·부산·광양 등 지난 5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실적은 34건으로 중국의 1/80에 해당함
- 경제자유구역 내 국한된 규제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시장 등에 과감한 개방을 통해 직접 투자유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음

### 3)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과제

#### □ 필요성

○ 한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요구되는 글로벌 인재와 브랜드, 기초분야 R&D 등 핵심역량이 취약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IMD가 발표하는 두뇌 유출 지수에서 한국은 2006년 기준으로 4.91을 기록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도 비즈니스위크가 발표한 세계 브랜드 순위에서 한국은 삼성(20위)과 현대차(75위), LG(94위) 3사만이 100위 안에 기록될 정도 취약한 상황임
- 또한 R&D에서도 한국은 의료·정밀·광학기기 등 첨단 新성장 업종 투자는 미국의 8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임<sup>33)</sup>

#### □ 기본 방향

○ 기업의 글로벌 역량의 강화가 기업 차원을 벗어나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한 강화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우수인재나 R&D 분야의 투자 및 유치에 대해 세계 각국은 전담부서 및 재원 마련 등 국가차원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인재와 브랜드, 기초분야 R&D, 국제표준, 글로벌 시장 특성 등 기업자체의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역량분야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됨

#### □ 세부 정책 과제

○ 외국인 등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업시스템이 필요함

- FTA 등 시장단일화로 인한 국가 간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교류가 예상되면서 글로벌 인재의 확보 및 육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33) 표한형, 한국 R&D 투자의 문제점,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07. 7.

- 한국은 우수인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국내 우수인력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임
- 한편, 중국정부는 세계적 석학 1,000여명을 확보해 세계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일본도 정부차원에서 재원 마련을 통해 인재 확보에 나섬
  - 중국의 '뱀부 네트워크', 스코틀랜드의 '글로벌 스코트', 칠레의 '칠레 글로벌', 인도의 'R&D 네트워크'와 같이 한국도 국가차원의 해외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에게 연결시켜주는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국가브랜드 육성을 통해 기업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음  
    **개념** **현행 국가 브랜드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006년도 비즈니스위크가 발표한 세계 브랜드 순위에서 한국은 삼성(20위)과 현대차(75위), LG(94위)만이 100위안에 기록될 정도로 글로벌 브랜드가 적음
- 더 큰 문제는 삼성·현대차 등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현지인들에게 일본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임(미국, 앤더슨 애널리틱스사 조사, 2007.7)
  - 이는 미국의 국가브랜드 조사회사인 안홀트 지엠아이(Anholt-GMI)가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를 35개국 중 25위로 발표한 것처럼 낮은 국가브랜드로 인해 기업브랜드들이 국가브랜드와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실효성이 낮은 현행, 'Dynamic Korea'로 대변되는 국가브랜드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브랜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기초 분야 R&D 강화를 위해 해외기업 R&D 센터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됨**

- 화이자 제약은 전 세계에 250여 R&D 파트너를 확보하여 기초과학과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공동 R&D를 추진하면서 신약 후보물질 중 45%를 외부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들이는 전략을 구사함

- GSK 역시, 아시아 지역에 3개 R&D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아래 한국과 중국, 인도 등 3개 국가 중 2개국을 올해 말에 확정지을 예정임
- 기초 과학 R&D 분야가 취약한 한국이 단기간에 성장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기업의 R&D 센터 유치로 통해 선진노하우 획득과 인력양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행정규제 등의 완화뿐만 아니라 시설용지의 무상제공 등 적극적인 제안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됨

#### ○ IT 등 기업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R&D 비용의 지원뿐만 아니라 로비 등 정부차원의 물적 인적 지원 방안이 요청됨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선진국들은 자동차 기술개발과 동시에 자국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시장을 지배해 왔음
- 그러나, 한국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련 ISO표준 650여종 중 한국이 제안해 만들어진 국제표준은 단 한 개도 없음(국정브리핑)
- 타 업종분야의 경우, IT분야의 와이브로와 전자분야에서 중소기업인 경원엔터프라이즈의 '無세제 세탁기술'만이 한국이 소유한 글로벌 표준임
- 국제표준의 선점이 해당 특정기업의 발전 이외에 관련 산업군의 발전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R&D 비용의 지원뿐만 아니라 로비 등의 인적, 정치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신설이 요청됨

#### ○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현지에 먼저 진출한 기업들로부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과제가 필요함

- 글로벌 인재와 브랜드의 육성, 기초분야의 R&D 강화 등 글로벌 기업의 역량확보는 결국 현지시장에서의 한국기업들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 중국과 같이 현지 국가에 먼저 진출한 기업들의 성공노하우와 협력 가능한 현지 업체들, 정부의 규제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한국기업들이 실패하는 사례가 많음
-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글로벌화의 성공가능성 증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구축하는 과제를 실시함

#### 4)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 □ 필요성

○ 해외 글로벌기업과 비교해 한국기업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들은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이는 기존의 글로벌 역량을 갈아먹는 요인임

- IMD는 한국의 산업분류를 60개국 중 45위로 발표하였고, KDI는 1991년부터 2003년 까지 한국기업들의 노조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경제성장을 0.99%에 이른다고 발표함(2007.1)

- 반면, 페덱스, 도요타, 밀레와 같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20년에서 108년까지 노조의 無파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축적해오고 있음

##### □ 기본 방향

○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중재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 2가지 관점에서 개선이 요구됨

- 노사 간 협상 중재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서는 노조 중심의 협상력을 사측과 균등화시키는 대안과 협상과정에서의 정부의 중재 역할이 요구됨

-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경우, 노조중심의 정부의 노동정책 완화와 귀족노조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이 필요

##### □ 세부 정책 과제

○ 노조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 대체인력 허용을 위한 파견근로자 규정과 단체협약 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임

- 노사협상에서 사측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대체고용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사측의 협상력이 낮기 때문임
  - 이로 인해 단순반복 업무중심의 숙련이 필요하지 않는 공정마저도 대체인력의 허용금지로 인해 생산 공정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음
  -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도 2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잦은 교섭을 유발해 경제적 손실 규모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 사측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 등 근무제도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함

- 유럽에서는 일자리 보장 등과 함께 근로시간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섭으로 경쟁력을 확보 중임
  - 실례로 독일 다임러크라이슬러, 폭스파겐, 지멘스, 네덜란드 스메드, 프랑스 보쉬 등의 경우, 일자리 유지조건으로 근로시간연장과 임금동결에 합의함
- 반면에 한국은 근로시간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정부규제로 인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 노사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위원회의 정상화가 필요함

- 철도노조, 항만노조, 등 산업차원에서의 노조파업 문제는 기업의 자체수준을 넘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대단히 큼
- 그러나 노조파업을 중재하고, 노동정책 등 제도개선을 위해 설립된 노사정 위원회가 민주노총 탈퇴(1999년)와 한국노총 불참(2005년)으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음
- 노사 간 분쟁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창구인 노사정 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어 노조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가중되는 결과를 생산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채용·훈련·해고·퇴직단계 연령차별의 금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 한국의 1인당 GDP는 2006년 18,372 달러에서 2007년에 20,000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나, 평균 4%대의 저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 입성을 위해서는 기업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 요구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악화정책으로 인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대표적으로 올해 입법 예정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채용·훈련·해고·퇴직단계 연령차별의 금지에 대한 법령은 기업의 인력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이랜드 사태와 같이 유통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인력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노동정책의 완화가 필요함
  
-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수의 귀족노조의 정치적 파업에 대해 정부는 대국민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잦은 정치적인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귀족노조 문제가 한국사회에 주요 이슈가 등장하고 있음
    - 미국의 GM과 포드, 크라이슬러의 몰락을 가져온 귀족노조의 문제는 기업 수준을 넘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이 큼
  - 따라서 귀족노조의 정치파업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재제와 더불어 대국민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가 요구됨



##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

### □ 필요성

○ 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윤리, 환경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각됨

- ISO 26000 등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국제 인증 시스템 도입이 기업에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
- WTO, UN, OECD 등 국제경제기구들은 교토의정서 발회에 따라 환경문제를 국제간 거래에서 중요 이슈로 다루고 있음
- 한편, 한국 기업의 윤리관행에 대해서 IMD는 조사대상 60개국 중 36위로, 사회적 책임의 경우에는 30위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 □ 기본 방향

○ 지속가능성장과 사회적 책임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해야함

- 윤리, 환경, 경제 등 지속가능성장 분야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과제는 기반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 기업의 사회적 책임분야는 국내에 도입된 지 상당시간이 흘렀으므로 기업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의 촉진책이 요구됨

### □ 세부 정책 과제

○ 정경유착의 단절을 통한 기업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법의 범위 확대 및 보완이 요구됨

- 국내기업들은 ISO 9000(품질경영) 등 윤리경영 시스템 도입과 협력사 등과의 거래 투명성,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 등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기업의 과거 비윤리적 행위가 정치자금 등 정경유착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은 만큼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국회청문회의 상시 개최와 더불어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법 강화를 통해 정부차원의 윤리경영 기반을 조성해야 함
- 핀란드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등 각 행정당국과 법원, 각종 공공기관, 국영기업, 공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을 도입하여 정부와 기업의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를 단절시키고 있음

○ 국제 환경규제에 부합할 수 있는 환경기술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감축 대상국가에서 한국은 빠져있어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4.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한편, 지구온난화로 인한 탄소배출권 시장이 EU, 영국, 미국 등에 형성·확대되면서 한국기업들은 기술개발 부재 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외 및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차원의 R&D 지원이 필요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도입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 활동은 정부의 사회간접 자본, 복지, 문화 등 공공분야 투자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정부의 복지예산의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의 인력 절감효과까지 동반함으로써 이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지연되고 있는 ‘산업 발전법 개정안 및 사회적 기업육성 법안’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임

○ 기업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 삼성전자, 현대차, KT&G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기부금 등 사회 환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사회 환원 분야가 사회복지, 교육, 시설 등 매우 다양하며, 선정지 및 선정자 결정에 대한 정보들이 기업들에게 부족해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됨
- 대 정부차원에서 투자 우선순위나 지원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사회 환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

○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친기업 캠페인을,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반기업정서는 2001년, 세계 22개국 중 1위(엑센추어 조사)로 가장 높았다가 최근에 들어 약간 감소하는 상황임(대한상의·현대경제연구원 매년 조사)
- 외환위기 발생의 책임에 대한 오해와 부자 및 재벌에 대한 맹목적인 피해의식이 반기업정서를 생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문화적 가치관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특히, 지나친 반기업정서는 기업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와 투자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친기업 캠페인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이 정부차원에서 청소년 경제교육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것처럼 한국도 경제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친기업정서 형성을 정부가 주도해야할 필요가 있음

## 7. 환경 : 지속 성장 가능 경제 체제 확립

### □ 개요

- (현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환경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
  - 깨끗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증대와 이를 반영한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문제의 심화와 이에 따른 국제환경협약의 확대, 자원 고갈의 가속 및 자원민족주의의 확산 등이 요인
  - 따라서 환경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대두
- (필요성) 환경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 요소, 발빠른 선진국들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추진, 국제환경협 규제 강화,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국내의 취약한 환경 인프라 등에 의해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루어가는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선진국들의 경우 다양한 수준으로 경제·사회·환경 등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 및 추진
  -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심각성 증대로 국제환경협약이 강화됨으로써 일국의 경제는 외국의 환경규제와 더불어 국제환경협약의 규제하에 놓이게 됨
  - 석유 등 화석연료와 주요 희소 광물자원의 고갈과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로 에너지 효율적인 사회 구축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또 다른 핵심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중요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성장에 비해 환경보전과 사회통합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형편

○ (해결 과제) 국내 경제가 21세기에도 지속 발전 가능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 요소 강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체제 구축, 선진국의 환경규제 관련 전략 강화, 산업정책 차원의 해결책 모색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임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및 효율적 이용 체제 구축
-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 요소 강화** : 개발 또는 환경보전의 이익이 각 경제 주체에게 형평성 있게 귀속되도록 제도 정비
-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체제 구축** :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체제 및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및 산업 구조로의 전환 과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 **선진국의 환경규제 및 국제환경협약 대응 전략 강화** : 선진국 환경규제 및 국제환경협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회 요인의 극대화, 비용 요인의 최소화 전략을 강구
- **산업정책 차원에서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극복하는 한편, 대내외 여건 변화를 시장 확대와 수익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혁신지원/기존 기술 확산, 시장경쟁 강화 및 자본축적 유도의 맥락에서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정책을 추진

## 1)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 필요성

○ 자연자원의 보전 및 생산력 유지·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생산 요소로서의 자연자원 공급 능력 확보 및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으로부터의 피해 예방

○ 국토관리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

- 개발위주의 국토관리로 교통 물류비용의 증가, 홍수 물난리 등 자연재해 피해액의 증가, 대기오염 악화로 인한 건강 피해 증가 등 총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 기본 방향

○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및 효율적 이용 체계 구축

### □ 세부 정책 과제

○ 물 공급 및 보급 시설의 효율 개선 등을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강화

- 수질기준 강화, 상수원 확보 및 대체수원 개발 등을 통해 깨끗한 물 공급 확대
- 물 공급 및 보급 시설의 효율 개선, 물 재이용체계 강화, 수자원 통합관리 등을 통한 수자원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물 수급 예측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보완, 물수요 관리 국가종합계획과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을 추진

○ 환경·에너지 부문과 연계된 국토 관리 추진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단열재, 에너지 고효율재 시설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 에너지 절약 표준 설정 등을 통해 토지이용과 에너지-환경의 통합성 마련
- 도시 공간 내 자연공간의 창출·복원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유형 발굴 및 체계적 지원, 인구성장을 기초한 압축도시 개발방식과 함께 인구 저성장형 지방도시를 위한 압축도시 계획기법 마련 및 관련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자연 공간 확대를 위한 도시 리모델링 추진
- 수요가 없는 지역에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이 집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을 수요 관리적 계획으로 전환
- 보전지역 등이 많은 지역에 친환경농업, 생태관광사업 등을 차별화하여 지원 하는 등 자연보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 및 통합 강화

○ 해양오염 규제 강화, 해양생태계 보전 대책 등을 통한 해양 관리 강화

- 자연해안과 서식지 손실 방지제의 도입·시행, 연안·해양보호구역 통합 관리 등을 통한 연안 및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 연안·해양 통합관리체계 구축, 연안·해양생태계의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청정한 연안 및 해양 환경 조성
- 수산자원의 회복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미래지향적 수산업 육성, 선진화된 국제수준의 어업질서 정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모색
- 연안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 해양오염방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강구

○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 추진

- 폐도로의 녹지 조성, 대중교통수단의 분담율 확대, 자전거 도로 이용률 확대 등을 통해 교통부문의 환경개선 추진
- 도로 및 철도 시설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활성화

○ 산림의 환경공익 가치를 증대시키는 산림 자원 관리 강화

- 도시지역의 대기정화 숲 조성
- 공장, 도로 등 오염원 주변을 중심으로 녹지 조성
- 상수원 유입 지천, 도심지 및 농경지 주변 등 주요 비점오염원 인근 하천을 중심으로 '수질정화 숲' 및 '수원 함양림' 조성



## 2)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 요소 강화

### □ 필요성

-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압축 성장 과정에서 환경이라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고려되어 왔음
  -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되어야 함.

### □ 기본 방향

- 자원 및 환경 이용 측면에 있어 모든 경제 또는 사회 주체에 대해 공평한 기회 부여
- 기업의 윤리성을 높이는 방안 도입
-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 □ 세부 정책 과제

- 개발 또는 환경보전의 이익이 각 경제 주체에게 형평성 있게 귀속되도록 제도 정비
  - 개발 이익의 환수 비율을 높이고 환경개선으로 인한 이익은 이익 당사자 부담토록 제도 정비
- 불공정한 거래 요소 제거를 통해 기업의 윤리성 제고
  - 독점 등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여 경쟁을 유도
- 사회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의 경영활동 및 투자 유도
  - 환경친화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하는 한편 환경 파괴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강화
  - 환경경영을 촉진하는 제도 강화
- 기업의 이익, 사회적 책임 및 환경 책임성을 기준으로 기업 성과 평가
  - 기업 대출 금리 등에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
-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립
  -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과 평가 시스템 구축

### 3)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체제 구축

#### □ 필요성

-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에 대한 선호가 증대되는 한편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의 환경규제가 급속히 강화됨으로써 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 체제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
  - 에너지 및 자원 효율 제고 및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통하여 다가오는 에너지 및 자원 공급 위기에 대처 필요

#### □ 기본 방향

-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체제 및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강화
-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및 산업 구조로의 전환 과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 □ 세부 정책 과제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 강화
  - 환경라벨링 대상 확대, 친환경상품 보급 및 구매 촉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체제 확대
  - 환경친화적 생산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확대
  - 환경친화적 경영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확대
-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국내 각 경제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 개선 잠재량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 설정 및 추진 방안 도출
  - 환경친화적 생산 기술 및 제품과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에 정부 연구개발 집중 투자
  -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구축,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 확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체계 구축
  - 에너지세의 합리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조세 체계로의 전환
-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강화
  -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 강구
  -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 증대, 폐기물관리 선진화 등을 통한 폐기물 관리 강화
  -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선진화 추진,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및 유통실태 파악 강화 등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

#### 4) 선진국의 환경규제 및 국제환경협약 대응 전략 강화

□ 필요성

-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강화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어 우리의 수출에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
- 또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스톡홀름협약, 로테르담협약 등 국제 환경협약도 확대 및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경쟁 국가들의 환경규제 현황>

구분	규제 및 법규	발효시기	주요 내용
EU	ELV	2003.7.1	폐차 재활용 및 유해중금속 사용제한
	WEEE	2005.8.13	폐전기전자기기 수거 및 재활용 생산자의무 부담
	RoHS	2006.7.1	Pb, Cd, Hg, Cr6+, 브롬계난연제 (PBBs, PBDEs)사용제한
	REACH	2007.6.1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등
	EuP	2008	제품 전 과정 환경성 규제(친환경설계 의무화)
미국	연방법(RCRA)	1976	유해폐기물 사전처리 후 매립의무화
	Maine 주법	2005.1.1	가정용 제품의 수은 함유 금지
	California 주법	2007.1.1	CRT, LCD 등 9품목 RoHS 적용
일본	가전 리사이클법	2001.4.1	폐가전 제품 회수, 분리 처리 의무화
	PC 리사이클법	2003.10.1	폐PC의 회수, 분리의무화
	자동차 리사이클법	2005.1	사용완료 자동차의 재자원화
	전기전자기기 특정 화학물질 함유표시(J-MOSS제도 시행예정)	2006.4.27	7개 품목 전기전자제품(PC, 유닛형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의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의무화
중국	전자정보상품 오염억제관리방법(RoHs)	2007.3.1	Pb, Cd, Hg, Cr6+, 브롬계난연제 (PBBs, PBDEs)사용제한
	China WEEE	2007 시행	전자제품의 에코디자인, 제품정보 회수 및 처리에 대한 강제의무 부과

□ 기본 방향

○ 선진국 환경규제 및 국제환경협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기회 요인과 비용 요인을 분석

- 기회 요인의 극대화, 비용 요인의 최소화 전략을 강구

□ 세부 정책 과제

○ 선진국 환경규제와 국제 환경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국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거시 경제적 영향 뿐 아니라 각 업종별 영향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 강구

- 비용 상승 효과,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업종별로 분석

- 국내 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도 발굴

○ 선진국 및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환경규제로 인한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규제의 비용 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 모색

- 국제환경규제에 따라 새로이 창출 및 확대되는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전략 강구

- 국제환경규제로 인하여 국제경쟁력 약화되지 않도록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금융, 세제 등 지원방안을 모색

○ **업종별 환경규제 대응 관리 프로세스 제공 등을 통한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지원**

- 부처 중심의 환경규제 대응정책이 아니라 수요자인 산업 중심의 환경규제 대응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대응 프로그램을 업종별로 재정리하여 관련 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 **정보제공 차원 이상의 실질적 지원 제도 운영**

- 자금 및 기술 역량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관련 기술 및 인력 교육 지원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 강구**

- 교역 상대국의 환경규제 관련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적합성 평가 시험소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
- 규제 대상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시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험소의 역량 배양 방안 추진

○ **환경규제 관련 물질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

- 정부의 지원을 통해 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규제물질을 가치 시스템 상에 있는 기업들의 공급망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이러한 물질에 대한 관리를 규제 요구사항에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5) 산업정책 차원에서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 필요성

- 지금까지는 환경규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성장 둔화, 고용 감소 등)의 최소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정책 효과에 한계가 노정
  - 그러나 환경/에너지 시대에는 산업부문으로 하여금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여건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기회 요인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 대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여건 변화에 따른 비용 요인 최소화 또는 단순한 환경산업 육성 정책보다는 기회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차원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함

### □ 기본 방향

- 산업정책의 역할은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극복하는 한편, 대내외 여건 변화를 시장 확대와 수익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것임
  - 기술 개발에 보다 많은 전력을 투입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산업정책의 기본 수단은 혁신지원/기존 기술 확산, 시장경쟁 강화 및 자본축적 유도이므로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
  - 혁신지원/기존 기술 확산 : 연구개발 투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 시장경쟁 강화 : 반경쟁행위 규제, 기술경쟁 유도
  - 자본축적 유도 : 투자세액 감면, 저금리 대출

□ 세부 정책 과제

- 제조업의 친환경 생산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
  - 새로운 시장 확대 장애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강구
  - 친환경 상품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기업의 적극적 시장 참여 기회 창출
  - 글로벌 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술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
  - 기업의 친환경경영을 촉진하는 제도 강화를 통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유도
  - 주력기간산업의 IT, BT, NT 등 신기술 및 환경산업과의 융합 및 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정책 방안 강구
  
- 새로운 환경/에너지 시대의 유망 산업의 발굴과 성장은 과학기술계와의 공동 노력 하에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부는 이러한 연계 활성화를 지원
  - 인력양성 관련 부문에서의 혁신과 산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육성 필요
  -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비중 저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추진
  -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 등 시장 메카니즘을 통한 방안 모색
  
- 선진국들의 강화된 환경/에너지 효율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표준경영을 위한 전략적 지원 필요
  -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들이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표준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동향 제공을 통해 적절한 과제발굴을 유도
  - 특히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기준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 주력기간산업의 IT, BT, NT 등 신기술 및 환경산업과의 융합 및 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유도
  - 철강, 기계, 석유화학, 반도체 등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산업들이 신기술 융합 등으로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분야로 제품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성장 동력원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 8. 교육 :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적 자본 육성

### □ 개요

○ (현황) 인적자원개발은 경제성장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핵심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적자원개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임

-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참여율과 1인당 GDP간의 관계를 보면, 평생학습참여율이 높을수록 1인당 GDP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
- 평생학습참여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불평등도가 낮은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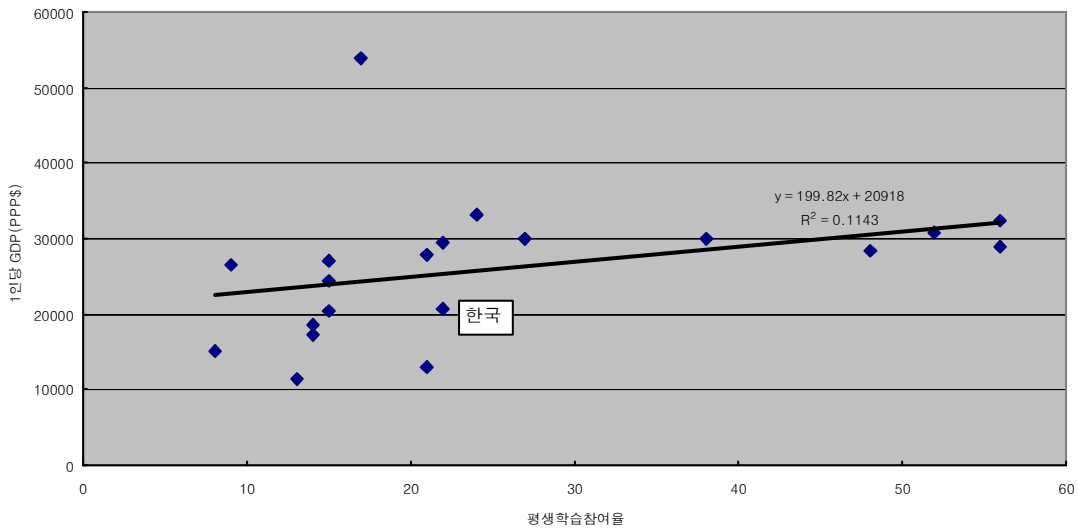
○ 또한 주요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 OECD의 경우 지식의 생산, 활용 역량을 구비한 교육받고 훈련받은 인적자원의 개발을 경제 및 제도적 체제, IT 그리고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와 더불어 지식기반경제의 4대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
- 유럽연합(EU) 역시 2005년 발표한 신리스본전략(Renewed Lisbon Strategy)에서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를 통한 인적자본 투자 증대를 10대 실행계획 중의 하나로 설정
- 정부의 개입을 선호하지 않는 미국도 2004년 발표된 국가혁신전략(Innovate America)에서는 연구개발·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혁신주도 성장 기반 확충과 더불어 인적자원개발을 3대 전략 중의 하나로 채택
- 또한 성장과 통합을 균형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2001년 수립한 균형발전미래전략(Finland 2015: Balanced Development)에서 모든 연령층에서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고령화 사회에 대비,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등 13개 미래전략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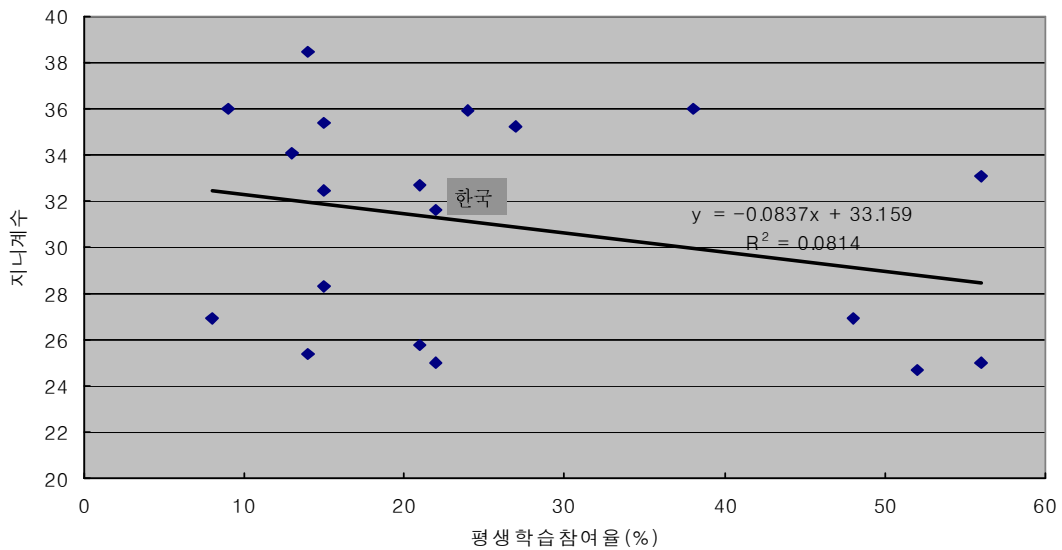


- (필요성) 주요국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국경 없는 무한경쟁 상황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큼

<평생학습참여율과 1인당 GDP의 관계>



<평생학습참여율과 지니계수의 관계>



- (해결 과제) 인적자원정책의 추진 과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평생학습의 활성화,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의 양극화 완화,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 해외 우수 인력의 적극 활용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크게 집약**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 :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세계 우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일류 대학의 육성
  -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개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추진
  -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의 양극화에 대한 대응 요청** :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인적개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
  - **핵심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지속** : 이공계 인력의 우수 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입을 유도하고, 이공계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이공계 인력을 양성
  - **해외 우수 인력의 적극 활용** : 고급두뇌의 활용을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고급두뇌가 있는 현지에 진출하거나 해외 우수 R&D인력의 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해외 R&D센터의 국내 유치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안의 모색이 필요

## 1)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 필요성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

- 고등교육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대학교육이 산업현장과 괴리되었다는 기업의 불만이 높음.

· 대학진학률은 82.1%('05년)로 거의 세계 최고 수준.

· 대졸 신입사원이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습득하기까지 약 8.36개월이 소요되며 신입사원 1인당 248.6만원이 교육훈련비로 지출되고 있음. 또 기업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대졸 신입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기업현장의 요구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77.8%, 4년제 인문사회계열 졸업생에 대해서는 76.3%, 4년제 이공계열 졸업생에 대해서는 62.3%로 나타남. 대졸 신입사원들의 전체적인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또한 5점 만점에 평균 3.09점에 불과(채창균 외,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신입사원 교육훈련』).

### □ 기본 방향

○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세계 우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일류 대학의 육성

### □ 세부 정책 과제

○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한 특성화 유도

- 대학교육의 경쟁력 미흡이 백화점식 학과(부)의 설치·운영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이러한 경향이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학교당 평균 학과수의 급증: '90년 37.5개 → '04년 56.5개).

-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과조정 및 통·폐합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점 분야의 집중 육성이 불가피하며, 이런 점에서 대학특성화는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방안이라고 할 것임

○ 소수 정예의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

- 세계적 차원의 연구 네트워크 속에서 교수 및 연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분야별 최고 교수의 선발·채용을 지원
- 성과중심의 승진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교수들간의 연구의 질 경쟁 시스템을 확립
- 외국 우수 대학과 교육·훈련프로그램이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joint venture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고등교육의 국제화 촉진

○ 다수 4년제 대학을 직업중심대학으로 육성

- 일부 대학을 세계 일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다수 4년제 대학의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할 필요
- 미국의 경우를 보면 1,362개 대학 중 박사과정까지 개설되어 있는 연구중심대학이 18.3%(249개교), 석사과정까지 개설되어 있는 교육/연구중심대학이 42.1%(573개교), 학사과정까지 개설되어 있는 교육중심대학이 39.7%(540개교)임. 전체 대학 중 약 40%의 대학에서 실용학문 중심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대학생직업능력평가제도의 도입

- 어떤 직업에서도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핵심직업능력을 파악하여,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이 능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대학(생)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현장적합적인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특히 이 핵심직업능력을 대학입학시점과 졸업시점에 두 번 측정함으로써 value-added의 관점에서 대학교육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
- 측정 결과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입사회망자의 능력에 대한 시그널 기능도 수행
- 테스트에 응시한 대학과 대학생에 대해서는 능력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도 수행

○ 자율적인 대학 경영체제(governance system) 정립

- 국립대학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특수법인화를 유도
- 국립대학간 연계·통합을 통한 교육·연구기반의 강화 유도
- 국립대학의 경영혁신 실적 평가를 통한 재정의 차등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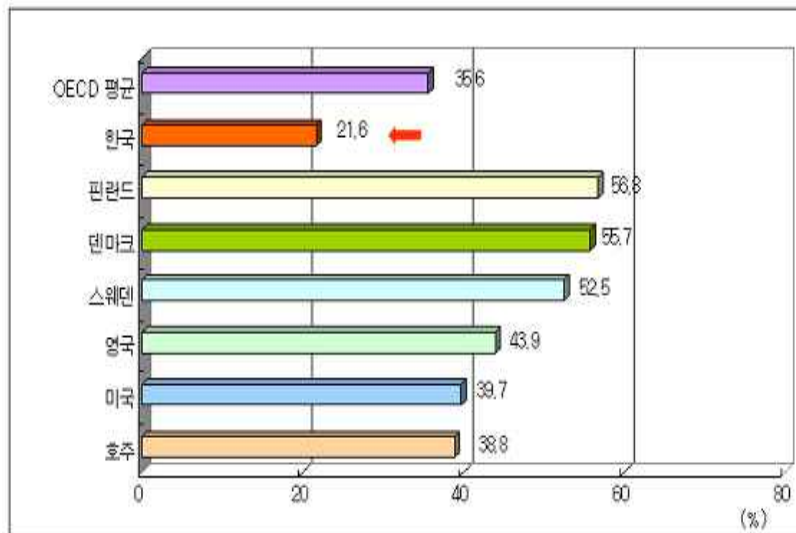
2) 평생학습의 활성화

□ 필요성

○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정규교육(formal education)만으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였지만,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서면서 지식의 갱신주기가 빨라지고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어 생애에 걸친 지속적 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2004년)은 21.6%로,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근로자 직무 관련 훈련 참여율도 14.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 비교 >



자료 :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 ; 통계청(2004).

□ 기본방향

○ 개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추진

□ 세부 정책 과제

○ 학습휴가권의 보장

- 학습을 위한 휴가가 현재처럼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을 넘어서서 하나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인에 의한 학습휴가의 사용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일처럼 노동시간계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노동시간계정제라 함은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여 나중에 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이 휴가를 이용하여 학습을 받을 경우 일정 정도의 추가 시간을 사용자가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훈련시간을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임

○ 학습계좌제의 도입

- 학습계좌제란 훈련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 은행 또는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 가상의 계좌를 개설하고, 스스로 훈련비용을 출자하면 정부와 사용자가 매칭펀드를 분담출자하는 형태로 학습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임. 이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음
- 단,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cheating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병행·추진되어야 함

○ 평생학습지원시스템(One-stop service for lifelong learning)의 구축

-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경력상담 - 학습 및 훈련 정보 제공과 지원 - 고용정보 제공’이 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이와 관련하여 평생학습 촉진자 또는 경력상담자의 양성 및 활용이 필요함

○ 노사참여적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기업내 교육훈련 설계 및 제공 과정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임금교섭 위주의 zero-sum적 교섭관행을 벗어나 숙련교섭(skill bargaining)과 같은 win-win 교섭관행의 정착을 유도

○ 평생학습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추진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업무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의 통합 및 연계 강화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조직 개혁에 대한 검토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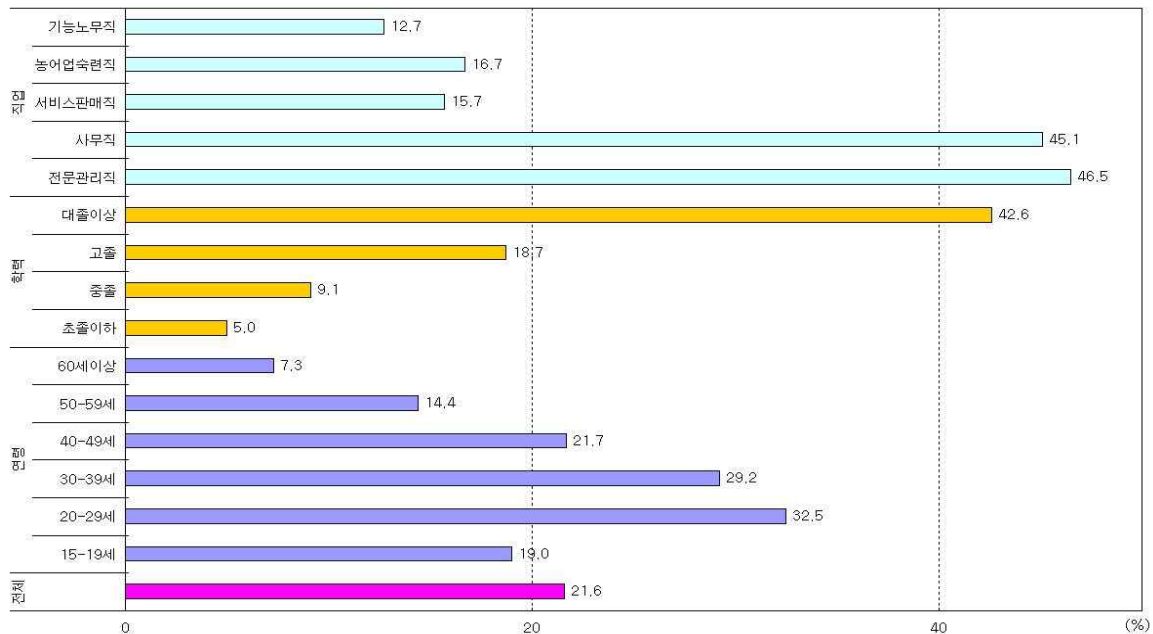
3)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의 양극화 완화

□ 필요성

○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 지위에 따라 평생학습 제공 기회에 격차가 있으며, 이는 다시 현재의 노동시장내 지위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존재

- 저학력, 저숙련, 중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기회가 매우 제한적

<평생학습 참여 기회>



자료: 통계청(2004). 『사회통계조사』.

○ 또 노동시장내의 격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사교육비 지출 등)의 격차를 초래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부모세대의 경제적 격차를 자녀세대에 재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태임

- 부모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수능시험 점수의 백분위도 높아진다는 점이 확인됨(국어의 경우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학생에 비해 500만원 이상 학생의 성적의 백분위가 10%p 가까이 높으며, 수학의 경우 17%p, 영어는 18%p의 격차가 존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구교육고용패널조사(2004))

□ 기본방향

-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인적개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

□ 세부 정책 과제

○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중소기업의 경우 CEO가 학습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는지가 종업원의 인적자원개발에 매우 중요하므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가 학습CEO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간 훈련컨소시움의 지속적 확대
- OJT 등 비형식적 학습의 활성화를 지원

○ 취학전 저소득층의 자녀(0~5세)에 대한 영유아교육 지원

- 영유아기에 벌어진 교육격차를 취학이후에 좁히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상태
- 따라서 유아교육을 민간차원에 맡겨두기 보다는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교육으로 운영하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추진



○ 학습결손 및 학력미달의 최소화를 위한 지원강화

- 기초학력기준을 설정하고,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습결손 및 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사교육비 부담 경감

-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학교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 추진
- 대학 입학은 어려워도 졸업은 쉬운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 입학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대신, 졸업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등단계에서의 사교육 의존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학입시제도를 설계할 때, 고교단계까지의 학업성취수준보다 대학에서의 수험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
- 현재의 ‘방과후 학교’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가계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른 차등적 지원 체제를 구축

○ 대학 학자금 용자 확대

- 고등교육에 대한 현재의 재정지원 방식은 교육복지와 상충됨. 예를 들어 서울대와 같은 우수 국립대에 재정지원이 편중되는 것은, 가정배경이 좋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치 못함.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 용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4)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

##### □ 필요성

○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많이 양성되어야 함

○ 그러나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하여 이공계 분야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1등급을 받은 우수 학생 중 수능 자연계열에 응시하는 학생의 비중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임. 그 비중이 1998년의 27.6%에서 2001년에는 19.5%로 크게 줄어들었음

- 또 자연계열을 선택한 학생 중 많은 수가 궁극적으로 의약학 분야를 지원하는 '자연계열 우수 학생의 의약학 선호현상' 역시 함께 확인됨. 자연계열로 진학한 우수 학생 중 이학·공학 학과에 진학한 학생의 비중은 1998년 53.9%에서 2001년에는 44.2%로 크게 줄어들었음

○ 이렇게 우수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공계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이공계 졸업생은 인문사회계에 비해 비자발적으로 퇴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공계 졸업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도 의약학 분야의 인력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자영소득의 경우 그 격차가 더 현저함

□ 기본방향

- 이공계 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입을 유도하고, 이공계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이공계 인력을 양성

□ 세부 정책 과제

○ 질적인 인력양성 정책으로 전환

- 이공계 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전반적으로 전문학사나 학사, 석사 수준에서는 초과공급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박사급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공급이 부족함. 양적으로 공급은 많이 되고 있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풍요속의 빈곤’ 상황에 처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대학의 이공계 인력 양성 지원 정책의 경우,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인력양성규모를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식의 ‘선택과 집중’이 요청됨

○ 과학기술인력의 소득 향상 지원

-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학생이 이공계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상대적인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
- 이와 관련해서 균등소득을 위한 조세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등 경쟁 직종에 대한 공평과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소득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임

- 또 균등소득을 위한 연구비 정책도 검토 가능함. 미국의 경우 외부연구비 중 2-3개월치 급여에 해당되는 액수를 summer salary로 인정하는 관례가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대학의 이공계 교수에 대해서는 연간급여의 일정 한도(예컨대 15%) 내에서 외부연구비를 급여로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과학기술인력의 고용안정성 제고 유도

- 이와 관련해서 이공계통 국가출연 연구기관 소속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안정성 확보에 따른 연구 인센티브 저하 문제는 연구 성과에 보다 긴밀히 연동된 급여체계의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것임

○ 과학기술교육과 영재교육의 강화

-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brainware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과학기술교육과 영재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
- 가칭‘장영실위원회’를 만들어, 과학기술교육과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자문과 건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채널 구축

○ 융합기술분야의 인력 양성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융합기술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학제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함. 그러나 학문-학과간 장벽으로 인해, 학제간 분야, 융합분야인 차세대 성장동력 인력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모색이 시급

## 5)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적 글로벌 소싱 체제 구축

### □ 필요성

○ 인적자원이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국내의 가용 우수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으로, 외국의 우수 인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적자원의 글로벌 활용 체제가 아직 미정립된 상태임

－ 국내 우수인력의 유출이 심각함

·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두뇌유출(Brain Drain)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2년 7.3에서 2002년 4.6을 거쳐 2005년에는 5.9를 보이고 있음.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두뇌유출이 악화되다가 근래 두뇌유출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싱가포르, 인도, 일본 등에 비하면 두뇌유출이 심한 상태임

○ 나아가 해외 우수 연구개발인력의 국내 활용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외국인 연구원 활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3년 현재 2.1%로 아직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해외연구소의 설립 및 활용도 아직은 제한적인 상황임

－ 지난 1981년 최초의 해외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1996년에 누적 갯수 19개를 거쳐 2001년 39개, 2004년 60개 수준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지만, 절대적으로는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음

○ 외국계 R&D 센터의 국내 진출도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외국계 R&D 센터의 국내 진출 현황을 보면, 2003년 10월 기준으로 100% 외국인투자기업 중에서 기업연구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134개이며, R&D 전담부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25개에 불과함
- 더구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정보통신과 전기전자와 같이 한국의 대외 기술 경쟁력이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R&D센터의 국내 진출 목적이 국내 기술의 흡수와 활용에 있으며 해외 우수 R&D인력의 국내활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판단됨

□ 기본 방향

- 고급두뇌의 활용을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고급두뇌가 있는 현지에 진출하거나 해외 우수 R&D인력의 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해외 R&D센터의 국내 유치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세부 정책 과제

○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재외동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이들의 국별 규모, 성별, 직업, 학력 등 제반 인구학적 통계가 파악되어야 재외동포 정책의 효과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임
- 동질성 유지를 위한 민족교육도 반드시 필요함. 현재 관련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적으로도 미흡하고 질적 문제도 적지 않음
- 이런 노력들과 더불어 재외동포를 적절한 구조로 네트워킹하여 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들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해외 R&D인력 활용의 다변화

-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 등으로 교류대상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 고급두뇌의 활용기관이 연구기관 및 대학에 집중되어 있고 산업체에서는 실질적인 활용이 미흡한 상태인데,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

○ 해외 R&D센터의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책 마련

- 해외 R&D센터의 국내유치시, 국내 기술의 흡수와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R&D센터 보다 신제품 및 핵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R&D센터를 더 우대하는 방식의 지원책 마련

○ 해외 R&D인력 활용과 국내 R&D인력 양성을 연계

- 해외 R&D인력의 활용이 국내 R&D인력을 대체하고 이의 양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기술역량이 퇴보할 수 있는 만큼, 해외 R&D인력 활용이 선진 기술의 확산과 함께 국내 R&D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R&D인력 활용과 국내 R&D인력 양성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 국제도시의 건설 추진

- 해외 우수 R&D인력의 국내 유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언어·의료·교육 등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채택된 국제도시의 건설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이러한 특별 구역의 설정은 사회적 통합성(cohesion)과 일관성(coherence)의 유지란 측면에서 보면, 제한된 영역에 별도의 사회문화적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구하면서 해외 R&D인력 활용을 위한 중요 인프라로서의 '국제도시'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9. 의식 가치관 : 사회 갈등 해소 및 국민 통합

### □ 개요

○ (현황)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갈등 관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집단적 가치 표출로 인한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상황
  -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적 분화 및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집단 간 갈등 현상이 증대되고 있음
  -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 사회는 다양한 욕구 분출과 조정 미흡으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해소가 선결 과제임

- 전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갈등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의 제도화가 요구되지만, 이를 위한 갈등관리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
  - 사회갈등을 완전 해소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은 제도화 되어야 하며 사회적 신뢰를 기초로 한 갈등관리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 사회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선진사회로 도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는 중요해짐

-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 내부 불신과 균열을 대승적으로 치유하는 사회갈등 해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
  -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은 사회구성원의 광범위한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함

○ (필요성) 사회갈등은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의 원인이 결합된 복합적 갈등이라 할 수 있음

- 사회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정치적 차원 : 과거 민주주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이념 및 지역적 갈등



- 독재와 민주화 세력 간의 정치적 이념의 차이, 정치권력의 불균등 배분, 가치조정 과정에서의 대립 등을 통하여 정치적 감정의 대립
  - 과거 군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 현상은 사회적 가치 및 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
- **경제적 차원** : 성장과 분배의 형평성, 공정성 결여로 인한 빈부간의 갈등
    - 경제적 갈등은 성장 위주의 발전과정에서, 원칙에서 벗어난 소득과 부의 소유 정도의 불균형, 사회적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에서 비롯됨
    - 오늘날 호전적 노사관계가 대표적 사례이며, 일부 사회지도층의 사치와 향락, 과시의식 속에 상대적 빈곤감, 소유 결핍증 등의 갈등 초래
  - **사회적 차원** : 사회 내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추구가치 대립
    - 급격한 사회 변동 과정에 따른 다양한 가치관의 출현과 대립, 가족 문제 등 사회체계의 기능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이탈 현상 심화
    - 집단 이기주의가 심화되면서 자기중심적 사고와 책임전가, 흑백논리의 이분법적 가치 추구로 인한 이해관계의 대립
- (해결 과제) **선진화 의식 개혁, 통합의 리더십 확립,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법치확립과 성숙된 사회질서 형성, 인권신장과 삶의 질 개선 등의 과제를 통해 사회 갈등 해소하는 길을 모색**
- **선진화 의식 개혁** : 선진 경제에 걸맞는 일류 시민의식 구축과 시장 경제 및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 확립** :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권위의 복원 및 사회 부문의 통합의 리더십 제고
  -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 원활한 갈등 관리 및 해결 시스템 마련과 이해 당사자들이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가는 성숙된 문화의식 구축
  - **법치확립과 성숙된 사회질서 형성** : 합리와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선진 사회 구현과 질서 의식과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기반을 구축
  - **인권신장과 삶의 질 개선**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향유의 기회를 확대

## 1) 선진화 의식 개혁

### □ 필요성

#### ○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적 수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사회 질서와 의식 수준의 향상이 전제됨

- 사회 질서와 의식이 낮은 수준을 맴돈다면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고, 경제가 정체돼 있는 상황 하에서 사회 질서와 의식 수준의 올바른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움

### □ 기본 방향

#### ○ 선진 경제에 걸맞는 일류 시민의식 구축

#### ○ 시장 경제 및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 □ 세부 추진 과제

#### ○ 법 준수에 대한 시민 교육

-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손해 보는 일이 아니라 사회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인식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교육이 필요
- 법 제도에 대한 신뢰

#### ○ 시장 경제 교육

-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일선 학교에서 좌파 경제학 이론을 추종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득세하면서 학생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반시장 교육이 없지 않았음

- 효율적 생산, 합리적인 소비, 투자와 기업 활동, 시장 경제 및 국민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반기업 정서 해소, 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 등이 교육 내용임
-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제에 눈을 뜨게 해 주는 교육은 어려서부터 필요함
  - 시장경제가 일찍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경제 교육을 통해 돈을 벌고 쓰는 법을 가르침. 돈이 부모의 지갑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창의성, 그리고 서비스의 대가라는 것을 저절로 체득하게 해주는 교육임

#### ○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회문화 정착

-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우리 사회가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갖는 이른바 20 대 80의 경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움
- 이같은 상황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계층 간 위화감을 없애고 갈등을 해결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임
- 기부 문화의 활성화, 부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다원주의 가치관 교육

-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에 타협과 합의를, 분열과 차이가 있는 곳에 관용과 포용을 가져오려면 진정한 다원주의가 필요함
- 집단주의, 순혈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다원주의가 뿌리를 내리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
- 우리 사회에 적용할 다원주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합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임(한준 연세대교수)
- 최근 우리 사회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는 것에 대비하여 글로벌 가치관을 구축하는 것이 요망됨

## 2)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 확립

### □ 필요성

-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요구, 주장이 존중되고,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합일점을 찾아나가는 사회, 상호 이해관계도 적절히 조정해 양보를 통해 역량을 모아가는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요, 선진화된 사회임

### □ 기본 방향

-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권위의 복원
- 사회 부문의 통합의 리더십 제고

### □ 세부 추진 과제

#### ○ 사회적 권위 구축

- 우리 나라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어른이 부재, 즉 사회 갈등의 조정을 위한 권위가 해체되어 있는 상황임
- 사회 통합과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슈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권위를 지닌 사회 명망가, 원로, 전문가 등이 필요함

○ 통합적 리더십의 대통령

- 대통령부터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 극단적 대립을 피하면서 목적 달성 방법을 모색하는 현명한 대통령이 바람직함

○ 정부와 국회의 갈등 수렴, 조정과 사회 통합 기능 복원

- 정부와 국회 등 정치의 주 기능은 다름 아닌 ‘이익 조정’ 및 ‘갈등 관리’이라는 점을 인식, 정부와 국회가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사회 통합 기능을 복원해야 함

○ 시민단체 등의 리더십 제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전문가단체, 학계 등이 제3의 중재자가 되어 갈등을 해결할 경우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한데, 이때 이해당사자들이 이들 단체들을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망됨
- 시민단체(NGO)의 전문성 및 공정성, 중립성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언론의 정론 형성 능력 제고

- 현재 우리 언론은 중립적인 견지에서 공정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갈등 당사자들의 한쪽 편에 기울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 3)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 □ 필요성

○ 1987년 민주화 이후 억눌렸던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면서 정부 일방주의나 법 만능주의로는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환경 변화가 일어남

- 이러한 환경적 변화와 이해관계는 복잡다단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취약

- 우리 사회는 미숙한 갈등 관리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적 요소가 되고 있음

○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란 협상, 개입, 제도적 메카니즘 및 다른 관습적 방법을 통해 갈등의 강도와 그 영향을 조절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함

- 더 구체적으로는 갈등 관리는 갈등이 확대되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건인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베르코비치)

- 결국 얼마나 갈등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갈등이 건설적인 갈등이 되느냐 파괴적인 갈등이 되느냐가 결정됨

#### □ 기본 방향

○ 원활한 갈등 관리 및 해결 시스템 마련

○ 이해당사자들이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가는 성숙된 문화의식 구축

□ 세부 추진 과제

○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여, 갈등이 악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2005년 5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시도했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됨
- 이 법안에는 ▲정책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하듯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 갈등관리를 조사·연구할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 관련 이해 당사자 집단이 모두 동의하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 전문가가 없으면 기술적, 논리적 토론에 의한 문제 접근보다는 감정의 논리가 우선할 위험이 대단히 높음
- 민간 중심의 중립적이고 전문화된 갈등 조정 연구기관을 두고, 사회 각 섹터간의 갈등관리의 틀을 서로 공유하고 그 노하우를 접목시키고 갈등조정 전문가를 키우는 역할을 맡음
- 미국의 경우 미국연방조정화해기관(FMCS)은 전국 200명의 알선조정 전문가를 선임해 문제가 터지면 이들 민간 전문가들이 우선 문제를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그래도 안될 경우 법으로 해결함

### 선진국의 갈등 조정 방식

미국 등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오래 전부터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은 1996년부터 ‘행정분쟁해결법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행정분쟁해결법’은 대결 지향적 분쟁 해결 방식을 피하고 대안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 외의 분쟁해결 방식) 기법 사용을 의무화한 법이다. 각 기관의 고위 관료를 분쟁 해결 전문가로 임명하고 화해와 조정, 합의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은 정부가 규제 관련 규칙을 최종 제안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하기 위한 법이다.

미국은 정부기관 간 ADR 실무그룹을 비롯해 법무부 분쟁해결실, 미국환경분쟁해결원, 연방조정알선청(노사관계법), 지역사회 갈등해결센터(주정부의 주의회, 주법원 산하 분쟁 해결) 등을 두고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독일은 대규모 계획 수립시 계획 확정에 앞서 먼저 두 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거친다. 2단계를 거쳐 주민 의견이 수렴된 계획안은 지방의회의 심의 및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독일은 건설법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전 조정해 갈등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적 소송보다는 협상 조정 중재 등의 ADR 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00~220시간 교육과 실습으로 민간 갈등 조정인을 양성해 다양한 분야에 이용한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교통포럼’을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비롯해 경제사회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최고행정자문기관 등을 두고 공공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분쟁을 방지한다. 일본은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ADR법)에 의해 분쟁해결 사업자를 인정해 주고 이들을 통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6년 7월 13일)



○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 협약 및 조정 기구 내실화

-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중심에 서있는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내실화가 필요
- 국가 정책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회 협약’을 맺어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힘을 가질 수 있음

선진사회의 타협 모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 1938년 살트요바덴 (Saltsjobaden) 협약을 통해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를 완성</li> <li>- (오스트리아) 노사정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의 부국이 됨</li> <li>- (네덜란드) 폴더 모델</li> <li>- (아일랜드) 서유럽의 지진아로 불리던 아일랜드가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을 앞질러 불과 10여 년 만에 3만 달러를 달성</li> </ul>

○ 공청회, 청문회 등 여론수렴제도 활성화

- 갈등 해결은 ‘결과’보다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더 중요함
- 이런 의미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활성화가 필요함
- 이와 관련, 갈등관리가 안 되는 것은 협상문화와 포용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덕목이라는 것을 유년 때부터 교육시켜야 함

#### 4) 법치 확립과 성숙된 사회 질서 형성

##### □ 필요성

○ 다양한 집단 간 이해 갈등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원칙과 법치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도전받고 있음

- 사회 지도층에 의한 법과 제도의 악용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전통 윤리와 서구 시민 윤리 간의 조화를 달성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정립이 필요함

##### □ 기본 방향

○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원칙이 지켜지는 성숙한 사회를 지향하며, 합리와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선진 사회 구현

-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을 확립

○ 글로벌 시대의 다원화된 가치를 존중하며, 질서 의식과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기반을 구축

##### □ 세부 추진 과제

○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

- 불법 시위 및 파업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공권력에 의한 합리적 절차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
  - 특히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에 영향력이 큰 지도급 인사의 비리에 대해 예외 없는 처벌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갈등 소지를 차단
- 법 집행 관련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및 시민단체로 이루어지는 통합 조직을 설치하고, 법률 규정의 현실화로 법치의 실효성을 제고

○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상위 계층의 불법 행위 및 정경유착에 대한 처벌 법규 및 제도적 장치의 현실화가 필요
- 특히 성장과 분배의 형평성, 경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다방면의 의견 수렴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부의 정당한 축적 및 부의 사회적 환원을 장려하는 사회적 인센티브 개발 및 원활한 기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실시

○ 권력의 효율적 견제 장치 마련

- 모든 권력은 스스로 절제가 필요하며, 특히 특정 권력이 일방적으로 장악하거나 서로 유착할 때에 갈등 소지가 발생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부문과의 경쟁 시스템 도입 및 확대를 통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절제된 공권력 행사를 유도
- 한편 권한 위임에 따른 통제 및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주민소환제 등 사후적 점검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
- 정보사회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 권력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권력의 견제를 위한 사회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

○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 시민의식 고양

- 사회적 가치의 다양화에 걸맞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시민대학 등 민·관·학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시민 윤리를 고양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
-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가치관 및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성숙된 시민 윤리에 대한 국민 계몽 활동 강화
- 선진 시민의식의 척도를 개발하고 시민 교육을 담당할 국민운동본부의 신설과 공공질서 준수에 관한 국민 실천 매뉴얼 확립
- 시민의식의 국제화 및 시민의식의 고양 사례에 대한 적극적 발굴과 제도적 인센티브 개발

## 5) 인권 신장과 삶의 질 개선

### □ 필요성

○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은 많이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이 존재

- 인권 및 삶의 질 개선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 국가 등 공동체 이미지를 판단하는 척도임
- 글로벌화 진행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적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다양성 존중에 입각한 보편적 가치의 구현이 요구됨

### □ 기본 방향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향유의 기회를 확대

-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며,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잘 사는 선진 사회 건설을 지향

### □ 세부 추진 과제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확충

-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인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은 의료, 노동에서는 물론, 의식주 등 기본적 인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노동 등 기본적 인권 신장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 바우처 제도 등의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 보육 서비스 확대 등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
-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민간 및 제3섹터에 의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상설기구 설립 및 제도적 뒷받침

○ 종합적 문화 인프라 확대

-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문화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
- 상대적으로 문화적 향유의 기회가 적은 계층 및 지역에 대한 문화 공간 등 문화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여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제고
- 선진 문화와 우리 문화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공연예술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 민간 차원의 자발적 문화 진흥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향유 기회를 지원

○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생태 및 환경 조성

- 고령화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도심의 녹지 확대 및 환경 친화적 주거 건설로 국민 모두의 건강한 장수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향
-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차원의 친환경 활동에 공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생태 보존을 위한 지원 확대
-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입각하여, 민관 협동의 자원 재생을 위한 사회적 투자 활성화를 촉진

○ 공정한 기회 부여와 사회적 보상의 합리화

- 사회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회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므로,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보상이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
- 공익에 대한 기여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보상이 부여되는 사회적 보상 체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구축
- ‘인권 신장과 기회 균등 위원회’ 등의 상설화로 사회적 소외 계층의 교육, 노동 등의 측면에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사회적 기회 제공을 추진

(여 백)